

전략연구 2017-22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coco@cni.re.kr

연구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범위

과소·고령화로 농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 가정주부나 농업보조자의 역할에서 현재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영농활동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노동은 60% 이상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평균 1천평 미만이며, 여성농업인들의 정책대상자 선정, 정책자금 대출 제한, 농업종사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농업에서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권리 및 위상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도 미흡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도농격차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남, 충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문화·복지 분야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2017년 충남에서도 처음으로 행복바우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행복바우처는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7년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실태 분석과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행정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농

어업인 복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계획, 연구,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찰하여 여성농어업인 복지차원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책의 이해 및 고찰(여성농어업인 복지 고찰, 문화바우처 및 행복바우처 정책 고찰)
-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분석(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도의 지침 분석)
-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분석(충청남도 운영 현황, 충청북도·전라북도 운영실태 분석)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여성농어업인 복지의식,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조사)
- 쟁점 및 정책제언(여성농어업인 복지 및 행복바우처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 여성농어업인 복지의 고찰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고찰하기 위해 계획적 측면과 연구적 측면 그리고 사업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계획부분은 농식품부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과 충남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고찰하였고, 연구부분은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를 고찰하였으며, 사업적 측면을 위해 충남 도농상생복지팀의 여성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였다.

● 농어촌 인구 구조 특성 상 여성농어업인 대상 복지 중요

농어촌 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과소화, 노령화,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에 여성농어업인 대상의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 여성농어업인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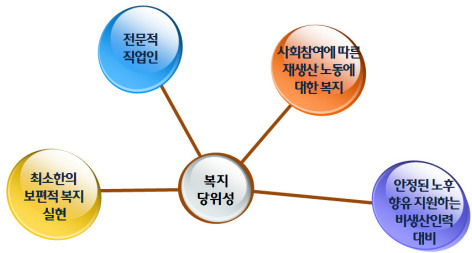
여성농어업인은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다.

●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 계획 수립의 당위성¹⁾

첫째, 전문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과 가사 병행이라는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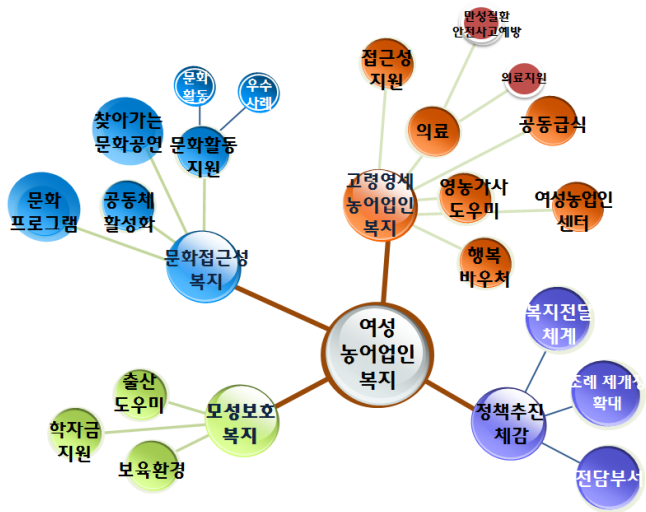
1) 오미란 외,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내용 발췌, 농식품부

대비한 복지 영역 필요,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농 격차 해소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건강, 문화라는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의 당위성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계획에서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수요 높음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재정계획에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부분이 6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8.8%를 차지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가 높았으나, 충남 계획에서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 재정이 79.3%로 가장 높게 수립되어 복지·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분석되었다.



여성농업인 복지 세부 계획 키워드

◎ 문화·여가·건강 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시책 분석 결과 의료, 교통, 행복바우처, 문화 활동에 대한 사업이 여성농업인 복지 부문의 시급한 정책으로 도출

행복바우처 사업은 자긍심을 높여주는 직업적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정책수요가 높으며, 출산도우미, 보육환경개선, 의료지원, 농촌형교통서비스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문화활동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농업·경영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관련조례 제정·확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 충남행복바우처와 타 지자체의 정책 비교

행복바우처의 사업 확산 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 충북도 첫 시행, 2014년 경기도, 2015년 강원도, 2016년 전라북도·제주도, 2017년 충청남도·전라남도·경남북도·경상남도에서 시행되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초기에는 의료부분의 사용이 가능하였다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2017년 올해부터 제외되었다.

충남을 비롯한 각 도의 행복바우처 지침을 목적, 추진내용, 사용범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남 행복바우처와 타 지자체 특징 비교

구분	충남	타 지자체 특징
목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초기 의료부분 가능하였다가 제외
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여성농어업인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여성농어업인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
면적기준	5ha	전남 : 폐지
주체	도	도
예산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운영관리 지원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발급	1차 모집 3월~4월 2차 모집 7월~8월 단계별 발급(대부분 하반기)	전북 : 익년 12월~ 상반기
사용처	온라인 사용 불가 농협하나로 마트 한약방	경기도 : 농기계수리점 전북, 경남 : 고속버스, 철도 강원 : 불링, 스키 /전북 : 인터넷 서점 경북 : 문화센터 / 경기 : 한약방
발급절차	복잡(신청서 교부, 자격 확인, 확정통보받음, 농협으로 직접 카드 신청 및 교부)	강원 : 대행발급 전북 : 서식 간소화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경기 : 20만원(자부담 4만원)
사용범위	전국사용	강원도 : 도내 / 경북 : 도내, 대구

● 구체적으로 충북과 전북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충남의 경우 개선하여 유동적·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와 농협의 농정지원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행복바우처 사업을 처음 시작한 충북은 첫 해 약 40% 가입률에서 현재 별도 홍보 없이도 약40,000명(2017년) 목표 달성하여 4월말 카드 발급 완료하여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초기에는 과대한 농사 및 가사 병행으로 인한 만장 질환 예방·치료를 포함한 목적이었다가 2017년 의료비가 제외되어 목적 및 사용처가 수정된 실정이다.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한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연령 확대 및 이주여성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기준은 완화하였고, 첫 해 사업추진 시 1차(4월 25일~)4차(9월 26일, 10월 21일 카드발급)까지 추진하여 15,000명 대상 중 11,347명(75.6%)이 가입하여 사용하였다. 2017년 사업 추진은 가입 신청을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가입 및 카드 사용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종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하여 작은 영화관과 인터넷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가맹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제시·갱신, 생생카드 지원 홈페이지 운영, 가맹점 입구에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등 사용 편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쟁점도출

● 여성농어업인 복지 부문 쟁점 분석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해결했다는 생각은 맞지 않으며, 여성농어업인 복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 필요하다는 쟁점이 도출되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 사업에 대해 고찰한 결과 모성보호복지, 문화접근성복지, 고령영세농어업인 복지, 정책 추진 및 체감을 위한 복지로 구분되었고, 그 중 고령영세농어업인 복지로는 행복바우처 사업, 영농가사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공동급식, 접근성 지원,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의료부분이 도출되었다.

문화접근성 복지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정책 추진 및 체감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조례 제·개정, 전담부서에 대한 사업이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 행복바우처 정책 쟁점 분석

행복바우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전국 도차원의 동일한 목적 설정 필요하다는 점, 사업 사용처의 동일화 및 가맹점 확보·발굴 필요, 사업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간소화 및 카드 발급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겨 카드 사용기간을 확보 필요, 적극적인 홍보 방법 및 국가사업으로의 역제안을 통한 국비확보 필요 쟁점이 도출되었다.

□ 정책제언

1) 여성농어업인 복지차원의 정책제언

● 농어촌여성 복지 공감대 형성 포럼 운영 및 사업 발굴

여성 지위향상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 포럼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직업적 영역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는 보지 보편성 원칙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들이 피해 받는 접근성, 하드웨어 시설, 프로그램 등 여러 부분이 취약하기에 직업적 복지로서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도 함께 되어야 한다.

● 전담부서 및 여성농어업인 지도단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을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 핵심동력인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 농어촌복지 학교 운영

문화 복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가치, 행복, 누릴 권한에 대한 학습을 위한 농정관련복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설명회 추진 등을 통한 농정 프로세스를 공유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행복바우처의 국가사업 역제안

모든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바우처는 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기에 행복바우처 공론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여야만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할 것이다. 행복바우처 공론화 프로세스 추진 방안으로는 7개 도가 연계하여 토론회, 철학적 근거, 집행 현황, 국가적 정책으로서의 의미 설정, 전국 차원의 동일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문화바우처와 동일한 형태의 추진·운영방안 추진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는 사업 대상자가 다르지만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다.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가맹점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힘들고, 온라인 사용도 불가능하여 사용에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바우처와 동일하게 온라인 사용 및 온라인 발급, 체계적인 관리 등을 추진하여 사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행복바우처 운영 개선 방안 제시

● 농어촌 여성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의 설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기존의 복지에 직업적 복지라는 것을 추가로 지원받는 직업적 복지로 접근되어야 하며, 초기 행복바우처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의 목적인 사기진작, 직업적 자긍심 고취, 삶의 질 고취에 직업적 복지라는 부분까지 포함한 목적 재설정 및 전국차원의 통일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의 적용대상 확대

농어촌은 70대도 생산가능인구이기에 농어업 생산 가능 직업 연령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1가구 1인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직업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1가구에 2명이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사용 가맹점 업종 범위

사업 목적에 맞는 가맹점 업종에 대한 원칙을 설정해 보면, 사회보장협약에서 의료비 제외 하도록 명문화되어있기에 직접적 의료비 사용은 제외되었고, 만성질환이 많기에 만성질환 의료기기는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 특성상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신청 및 카드발급의 용이성

행복바우처 사업은 홍보보다는 신청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초기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입 시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 발급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중앙농협까지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시군농협과 읍면동(또는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배부일자 등을 확정하고 농협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배부하는 절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 카드 발급이 매우 용이하기에 행복바우처 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 신청과 카드 발급의 용이성이 확보된다면 사업의 가입률 및 만족도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행복바우처 홍보강화와 관리 제도 도입

읍면동 이장협의회 등의 전달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행복바우처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이기에 부녀회장, 여성단체,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개선회 등을 통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협과 읍면사무소, 이주여성 다문화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회관 포스터 등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

● 정책 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활용 농어업인, 농촌 공동체 활성화 계기 등 사업추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강화해야한다.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여, 향후 농어촌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바우처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농어업인 대상 연말 시상,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내용	5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7
1. 여성농어업인 복지의 고찰	7
1) 여성농어업인 복지 계획 고찰	7
2)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 관련 연구 고찰	12
3) 충남 2017년 사업 추진현황 고찰	16
4) 소결	21
2. 바우처 정책 고찰	24
1) 문화바우처 정책의 이해	24
2) 행복바우처 정책의 이해	29
3) 소결	33
제3장 행복바우처 정책의 지침 분석	35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현황	35
1) 목적 및 방향	35
2) 정책대상	35
3) 예산 및 사업량	36
4) 사용처	38

5) 사업절차	38
6) 홍보	39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40
1) 목적 및 사업시행	40
2) 사업명 및 추진시기	40
3) 정책대상	41
4) 예산 및 사업량	43
5) 사용처	44
6) 사업절차 및 추진체계	46
7) 신청기간	46
8)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47
9) 종합	48

제4장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분석 51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51
1) 추진내용	51
2) 충남 행복바우처 사업량 계획 및 예산 지원	52
3) 가입현황	54
4) 사업의 문제점	55
5) 개선사항	56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57
1) 충청북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57
2) 전라북도 행복바우처 생생카드 운영실태	61
3. 소결	70

제5장 수요조사 71

1. 설문조사	71
1) 조사 개요	71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73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77
4) 소결	82
2. 인터뷰조사	84
1) 조사 개요	84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인터뷰 결과	85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인터뷰 결과	8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9
1. 쟁점 도출	89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에서의 쟁점	89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에서의 쟁점	89
2. 정책제언	90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	90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	93
부록1. 농어업인 범위 및 기준	100
부록2. 설문조사	103

표 목 차

〈표 1-1〉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부문별 재정계획	3
〈표 1-2〉 연구 흐름도	6
〈표 2-1〉 농식품부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8
〈표 2-2〉 추진분야별 재정계획	8
〈표 2-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9
〈표 2-4〉 충남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11
〈표 2-5〉 충남 추진분야별 재정계획	11
〈표 2-6〉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전략 및 세부과제	31
〈표 2-7〉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 연구의 정책과제	5
〈표 2-8〉 충남 도농상생팀 복지분야 비전 및 목표	61
〈표 2-9〉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내용	71
〈표 2-10〉 충청남도 농어촌복지 사업 추진현황	102
〈표 2-11〉 여성농어업인 복지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종합	32
〈표 2-12〉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52
〈표 2-1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52
〈표 2-14〉 문화누리카드 발급시기	62
〈표 2-15〉 지원대상 및 제외(충남도 사례)	103
〈표 2-16〉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충남도 사례)	23
〈표 2-17〉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 비교	43
〈표 3-1〉 2017년 사업비 현황(단위:명,천원)	63
〈표 3-2〉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지원계획	73
〈표 3-3〉 추진체계	8
〈표 3-4〉 지자체별 행복바우처 추진 목적	104
〈표 3-5〉 지자체별 사업명	14
〈표 3-6〉 지자체별 정책대상 연령	24
〈표 3-7〉 지자체별 지원기준	24

〈표 3-8〉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량	34
〈표 3-9〉 지자체별 사용처 현황	44
〈표 3-10〉 사업 추진 시기	64
〈표 3-11〉 변경 및 특이사항	74
〈표 3-12〉 충남 행복바우처와 타 지자체 비교	84
〈표 3-13〉 전국 도의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94
〈표 4-1〉 2017년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수요조사 결과(2016.8)	205
〈표 4-2〉 2017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지원계획	35
〈표 4-3〉 2017년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신청 현황(8.31기준)	45
〈표 4-4〉 개선요구사항	55
〈표 4-5〉 충남 지침 개선 사항	65
〈표 4-6〉 충청북도 행복바우처 사용 업종	85
〈표 4-7〉 충북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경과	95
〈표 4-8〉 충청북도 만족도 조사 결과	166
〈표 4-9〉 업종 가맹점 수	46
〈표 4-1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가맹점 현황(2017.1. 2일 기준)	56
〈표 4-11〉 전북 생생카드 사업 추진 경과	66
〈표 4-12〉 사업량 산출기준	66
〈표 4-1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66
〈표 4-14〉 전라북도 만족도 조사 결과	96
〈표 5-1〉 설문조사 개요	17
〈표 5-2〉 조사 대상자 현황	27
〈표 5-3〉 도시와 농어촌 복지 부분 격차	47
〈표 5-4〉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복지 부문 만족도	47
〈표 5-5〉 행복바우처 사업의 전달 방식	77
〈표 5-6〉 행복바우처의 사용처	97
〈표 5-7〉 인터뷰조사 개요	48

그림 목 차

[그림 2-1]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의 기본전제 및 당위성	1 2
[그림 2-2] 여성농어업인 복지 세부 계획 키워드	2 2
[그림 2-3]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62
[그림 2-4] 문화누리카드 관리 홈페이지	7 2
[그림 3-1] 정책 대상의 기준	63
[그림 4-1] 전복 가맹점 스티커	86
[그림 5-1] 여성농어업인계획 부문의 중요도	3 7
[그림 5-2] 여성농어업인 실태	37
[그림 5-3] 문화·복지서비스 정책추진의 필요성	57
[그림 5-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5 7
[그림 5-5] 사업 추진의 중요성	67
[그림 5-6] 농어업정책을 여성농어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6 7
[그림 5-7]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지 여부	7 7
[그림 5-8] 행복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8 7
[그림 5-9] 행복바우처 사업의 만족도	8 7
[그림 5-10] 행복바우처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9 7
[그림 5-11]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터넷(온라인) 사용의 필요성	0 8
[그림 5-12] 행복바우처 사업의 기여도	0 8
[그림 5-13]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	1 8
[그림 5-14] 행복바우처 사업의 국가운영 여부	1 8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환경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력 과중

과소·고령화로 농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 가정주부나 농업보조자의 역할에서 현재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영농활동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1970년대 여성농업인 비율 28%, 2006년 5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 증대²⁾).

여성의 노동력은 기계중심의 논농사를 담당하는 남성에 비해 노동집약의 밭농사 중심이며 밭농사의 경우 수작업 비율이 높고 작물이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들에게는 별도의 농번기, 농한기가 없을 정도로 노동력 부담이 심각한 실정이다.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31.3%로 1위를 차지하여 이와 같은 현실을 말해준다. 농사일 담당 비중 50% 이상 여성농업인은 66.2%이며 가사노동 75% 이상 담당 비중 82.8%로 가사노동도 매우 크다.³⁾

□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비율 증대

현재 농어촌의 과소·고령화, 젊은 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농가인구 절대 수 감소와 여성화, 노령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농업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며, 농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율도 증대되고 있다.

- 농업주종사 인구 내 여성 비율 : 1970년 28.3%, 2005년 51.9%, 2012년 53.0%, 2014년 53.4%⁴⁾

- 어가인구 비중 1970년 48.8%, 2000년 49.6%, 2014년 51.3% - 141,344명 중 72,443명⁵⁾

2) 강혜정·마상진,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2017.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

3) 태희원, 2016,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p.1

4) 농림부, 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권리 및 위상 낮음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2001. 12. 31)되면서 여성농업인이 정책수혜자 대상이 되었다. 여성농어업인을 주요 생산주체로 인식하고 여성농어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불과 20년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노동은 60% 이상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평균 1천평 미만이며, 여성농업인들의 정책대상자 선정, 정책자금 대출 제한, 농업종사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⁶⁾⁷⁾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농업에서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권리 및 위상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성농어업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고된 농업노동, 농사일과 집안일 병행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육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사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소득이 적다는 점(27.9%)과 고된 농업 노동(27.1%)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농사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16.8%로 조사되어 여성농어업인이 감수해야하는 다중노동에 대한 부담이 매우 과중함을 알 수 있다.⁸⁾ 여성 농어업인의 현실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병행으로 인한 만성질환, 노동부담, 낮은 소득, 문화 활동의 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성에게 집중되는 권한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낮은 상태로 여성농업인의 사기저하와 농촌정착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되고 있다.

5) 해양수산부, 2016,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6) 오미란, 2017.2.10., 여성농업인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나?, 한국농어민 신문

7) 태희원, 2016,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p.2

8) 안수영 외, 2014,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육구 조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p.50

농사일을 하는데 힘든 점 - 적은 소득(27.9%), 체력적으로 힘에 부침(27.1%), 농사일과 집안일 병행(16.8%)

□ 여성농어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미흡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제4차 계획이 수립되어졌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 제감을 느낄 수 없다는 여성농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선언적 의미만 지닌 것으로 여성농어민을 위한 기본계획이 현장에서는 정책효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영농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부담 등의 어려움 문제를 인식하여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과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생활, 문화복지 영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확충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도농격차 심각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 경감 31.3%,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28.7%로 나타나 복지시설 및 제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문화·복지에 대한 도농격차가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의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노동력 과중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즐기고 향유할 기회 접근성이 더욱 낮은 실정이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재정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 다음으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부문의 예산안의 비중이 크게 수립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및 노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부문별 재정계획

부 문	계 (2016~2020)	비율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488,368백만원	61.3%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52,910백만원	6.6%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11,843백만원	1.5%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229,909백만원	28.8%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3,883백만원	1.7%
총 계	796,913백만원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4기본계획, p.34.

□ 이러한 현 시점에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추진 필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문화·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남, 충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문화·복지 분야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2017년 충남에서도 처음으로 행복바우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충남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책 필요

충청남도는 2017년 처음으로 행복바우처 정책을 추진한다. 행복바우처는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7년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실태 분석과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행정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복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계획, 연구,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찰하여 여성농어업인 복지차원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정책의 이해 및 고찰(여성농어업인 복지 고찰, 문화바우처 및 행복바우처 정책 고찰)
-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분석(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도의 지침 분석)
-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분석(충청남도 운영 현황, 충청북도·전라북도 운영실태 분석)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여성농어업인 복지의식,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조사)
- 쟁점 및 정책제언(여성농어업인 복지 및 행복바우처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책분석을 위해 정책 관련자료 및 인터뷰, 정보매체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 및 인터뷰,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연구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여성농어업인 복지 및 행복바우처 정책 고찰을 위해 문헌자료, 정책자료, 웹사이트, 사업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분석 및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각 도별 담당자와 인터뷰, 지침, 웹사이트, 각 도별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차별성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셋째, 여성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수혜자 대상의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의식과 행복바우처 정책의식분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대표(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대표), 각 도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특성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쟁점과 정책제언을 위해 정보매체 분석, 수요조사자료 분석, 추진실태 자료 분석,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수행하여 실현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표 1-2〉 연구 흐름도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 여성농어업인 복지의 고찰

1) 여성농어업인 복지 계획 고찰

(1) 농식품부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⁹⁾

농업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비중 및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확대¹⁰⁾될 전망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수립되기 시작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4차 계획(2015년)의 목적은 “농업 및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하에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의 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

농어촌 현실은 다양한 복지·문화 등 정책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복지·문화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도시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고, 문화시설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시에 비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 절벽시대의 인구 소멸마을 도래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는 귀농·귀촌 여성농어업인,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나,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경우 문화활동의 기회축소는 안정적 귀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5년 농진청 조사 : 귀농 후 정착 장애요인으로 문화적 여건 부족 7.4%).

9)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내용 발췌

10) 농업종사 인구 중 여성비율 : (‘05) 51.9% → (‘12) 53.0% → (‘14) 53.4%

〈표 2-1〉 농식품부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전략 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 평등 실현 성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체계 개선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지역 개발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 기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보호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문화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이에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지원은 다양화되고 있는 농어촌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5대 전략 중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부분이 6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8.8%를 차지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가 높은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표 2-2〉 추진분야별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2016~2020)	비율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488,368	61.3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52,910	6.6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11,843	1.5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229,909	28.8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3,883	1.7
총 계	796,913	100%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전략의 중점추진과제인 중점추진과제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의 세부과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보육 및 돌봄시설 확대, 만성질환, 안전사고 예방, 건강관리, 접근성 지원을 위한 행복버스, 영농도우미, 교육문화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활동 및 문화 공연 사업 등이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표 2-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중점추진과제	세 부 과 제 명 (2016~2020년)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 유도
	국공립보육시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아이돌봄방 등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주말아이돌봄방 확대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농작업 안전관리 마을' 조성 확대
	복지부의 원격협진과 연계하여 농부증으로 인한 질환관리 강화 기반 마련
	복지부의 원격협진과 연계하여 농부증으로 인한 질환관리 1개소 시범 적용 및 연차적 확대
	농촌 취약계층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부처간 협업 강화 추진
	다양한 체감형 복지사업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 본격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을 농촌 시설 및 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복지 정주기반 구축
	방문 의료 등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행복버스의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지자체 자율의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사업 발굴 활성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농촌축제 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강화 및 여성 참여 유도
	여성농업인 주도의 소규모 문화활동 (문화 예술 교양 스포츠강좌 등) 지원
	농촌지역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 지원 강화 추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포상 등 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포상 등 추진

(2) 충남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고찰¹¹⁾

충남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충남 복지·문화부문 사업 계획은 국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과 동일한 체계로 수립이 되었다.

충남은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와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중점추진 과제에 ‘행복바우처 사업’, ‘행복꾸러미 사업’, ‘행복버스 및 영농도우미’, ‘문화활동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카드 발급·지원하는 계획이며, 영세·고령농 도시락 배달,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확산, ‘행복버스’ 및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소규모 문화 활동지원을 통해 내실화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중 2017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문화교류 활동 등을 위한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칭 행복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 사업규모 : 50,000명/ 7,500백만원(1인당 150천원 한도의 80% 지원)
- (추진배경) 제54차 충남여성포럼(2015.5.27.)에서 제안된 사업 정책반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만 20세~65세 미만)
- (지원내용)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미장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
- (기대효과)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육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문화교류 활동제공 등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카드 발급·지원

충남은 2016년~2020년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2,207억원을 투입하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농촌여성 주체 양성 5가지 추진전략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 79.3%로 월등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충청남도, 2015, 충남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내용 발췌

〈표 2-4〉 충남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전략과제의 세부과제

중점추진과제	세 부 과 제 명 (2016~2020년)	예산(백만원)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1,231
	농어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00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14,23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65
	농촌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5,950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0,785
	농촌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3,130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7,355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농작업 안전관리 마을 조성 확대	2,55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125
	농촌지역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실시	51,005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제) 급여지원	1,680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30,000
	농촌형 교통모델(DRT) 발굴 지원	1,500
	취약농가 인력 지원	5,250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750
	여성농업인 주도 문화활동 및 농촌축제 지원	81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5,600

〈표 2-5〉 충남 추진분야별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2016~2020)	비율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0	0.0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20,494	9.3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5,880	2.7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75,016	79.3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9,360	8.8
총 계	220,750	100.0

2)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관련 연구 고찰

(1)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¹²⁾

중장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에서는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주요지표인 5대 주요 지표를 기초로 세부 사업을 수립하였다. 이 중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정책과제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과 가정 병행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 향유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영역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과소화, 노령화,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지는 보편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농 격차 해소 실현에 노력해야 하며, 건강, 문화라는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현재 복지 관련 예산이 지방 양여금으로 이양된 현실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앙 부처의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현실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여성농업인들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 발굴 및 추진이 매우 시급하고,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에서는 생산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중이 필요하다.

12) 오미란외,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내용 발췌, 농식품부

〈표 2-6〉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전략 및 세부과제

구분	전략	세부과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복지서비스 정보전달 효율화	여성농업인 복지전달 정보시스템 효율화
	체감형 복지전달 서비스 강화	복지전달 시스템 다변화
모성보호및복지 서비스 강화	영농 가사 출산도우미 확산	가사도우미 인력육성 및 확대 영농도우미 인력육성 및 확대 임신출산 지원강화
	보육환경 개선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농촌 소규모 보육제도 확대 및 표준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고령영세 농업인 지원 강화	1면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건강 검진 증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면 보건지소 공간 이용도 제고
	공동급식 확대	농번기 공동급식 제공
	특별교통	수요응답형 통학 교통제공 통학택시 운영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소규모 동아리 지원	여성농업인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폐교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
지자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여성농업인 센터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연계 협력
	행복바우처 제도	행복바우처 제도 연계 협력

특히 지자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 연계 지원과 행복바우처 제도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직업적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정착 욕구가 높으며, 동시에 여성농업인들 끼리의 문화 공동체(공동영화보기 등)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발행된 복지카드로 지역경제에서 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가이드 라인 구축(연령제한 축소, 경지규모제한 확대)과 다양한 문화사업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행복바우처에 대한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행복바우처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금액의 카드만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시장과 연계한 서비스 사업 등을 네트워크 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진을 통한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 고찰¹³⁾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 고찰 결과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주된 어려움은 적은 농업 생산소득으로 여성농업인의 물적·경제적 토대가 취약하고, 고된 농업 노동과 다중노동(농사일과 집안일 병행)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정책 욕구로는 건강·의료, 복지시설·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복지) 바우처 도입, 여성농업인 육성관련 조례 제정·확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실생활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의료·복지·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욕구를 수렴하는 제도이며,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는 여성농업인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여성정책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13) 안수영 외, 2014,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욕구 조사 내용 발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표 2-7〉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 연구의 정책과제

구분	정 책 과 제
농업·경영활동 지원	마을 공동 소득활동 지원 시설 확충 여성 농기업 CEO 발굴 및 교육
삶의 질과 복지 향상	여성농업인 행복(복지)바우처 도입
정책추진 인프라의 변화 추진	여성농업인육성관련 조례 제정·확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충남 3농 혁신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으로는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 농촌복지 인력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이 부진한 이유로는 농업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대입이 부재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충남 농업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시각과 목소리로부터 도출되는 정책 요구들은 관련 조례의 제·개정, 전문 농업인으로서 지위 확보, 경영 역량 강화, 과중한 농업노동 경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은 생활에서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건강·의료, 복지시설·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¹⁴⁾ 의료와 복지 이슈는 여성농업인 개인차원에서가 아닌 정부, 지자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충남도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강화,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사업이 도출되었고, 여성농업인 제도의 전달방식으로는 마을자치조직 대표, 개별 농가방문을 통한 인적, 대면적 홍보방법을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을수록 맞춤형 복지증진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14) 건강의료(30.8%), 복지시설·서비스(16.7%), 문화·여가 생활(14.0%) - 자료 : 안수영 외, 2014,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욕구 조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p.81

3) 충남 2017년 사업 추진현황 고찰¹⁵⁾

충남 도농상생복지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농상생팀 복지분야의 비전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복지 증진이며, 이를 위한 성과목표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추진이다.

〈표 2-8〉 충남 도농상생팀 복지분야 비전 및 목표

비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복지 증진
성과목표	여성농업인육성 및 농촌복지증진 -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삶터, 일터, 쉼터) 추진
달성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42천명 63억원) - 5ha미만의 중소 고령농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 단계별 확대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업개요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50%), 도비 7.5(7.5%), 시군비 17.5(17.5%), 자부담 25(25%))
- 지원대상 : 2개소(아산, 서산)
 -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내용 : 농촌의 자연자원, 농산물 등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 지원
 - 시장조사, 시제품생산,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홍보 등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및 고령자 인건비 지원

15) 충청남도 농정국, 2017, 내부자료

□ 주요사업 내용

〈표 2-9〉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내용

보조사업자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아산 농촌애 협동조합법인	복합형 (소득사업+사회서 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또래 학습센터 운영
서산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복합형 (소득사업+고령자 인건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브랜드 개발, 포장재 구입 등 ▶ 고령자 인건비 지원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농작업·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농어업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개요

- 사업비 : 6,386백만원(도비 1,533(24%), 시군비 3,576(56%), 자부담 1,277(20%))
- 지원규모 : 42,570명(가구당 1명 지원가능) ※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한도 기프트카드 발급
- 지원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임·어업가구
 - 사용처 : 문화생활, 건강증진,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 16개 업종
 - 안경점, 목욕탕,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학자금(입학금+수업료)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규모 : 15,000명 / 3,471백만원(도비 1,041(30%), 시군비 2,430(7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중 고교생 자녀 등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기준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중 5ha미만 농지 소유자
-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4,400만원(2자녀), 4,800만원(3자녀) 미만자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4)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 사업규모 : 150개소 / 225백만원 ▶ 도비 67.5(30%), 시군비 157.5(70%)
- 지원대상 :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되어 공동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
- 지원기준 :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0명 이상인 마을
- 지원내용 : 마을별 급식 도우미 수당(인건비) 지원 - 1일 5만원씩 최대 30일(150만원)까지
- 2014년 150개소, 2015년 150개소, 2016년 150개소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여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규모 : 3개소(공주, 금산, 홍성) / 38.1백만원 ▶ 국비 10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영유아 3인 이상 20인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코자하는 시장·군수
- 지원내용 : 개소당 운영비 12.7백만원 지원
- (시설비) 공동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비 등 지원
- (운영비) 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6)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한다.

- 사업규모 : 3개소(아산, 계룡, 서천) / 80백만원 ▶ 국비 37.5(50%), 시군비 42.5(50%)
- (1년차) 국비 100%, (2년차) 국비 50%, 시군비 50% / 서천 자체예산 5백만원 추가 편성
- 사업기간 : 2개년 사업(1차년도 평가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아산, 계룡, 서천 : '16년부터 사업 추진, 올해 2년차 사업 진행
- 보령, 부여 : '17년 신규사업 공모 신청(농식품부 선정)
- 지원내용 :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지자체와 재능나눔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마을에 재능기부

(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고충상담, 교육활동, 방과후학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규모 : 7개소 / 980백만원(도비 217, 군비 574, 자부담 189)
- (법인센터) : 서천, 홍성, 예산 ▶도비 25%, 군비 70%, 자부담 5%

- (농협센터) :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지원
- 센터 1개소당 140백만원(자부담 포함) 지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 사업 추진 등

(8) 여성농업인 리더십아카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농어촌에 정착·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 : NH농협은행 당진시 지부(농정지원단)
- 사업비 : 30백만원 ▶도비 15(50%), 시비 15(50%)
- 사업규모 : 150명(농가주부모임 회원 또는 농업인교육 희망자 등)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여성리더십강좌, 참여(실습)프로그램, 선택교양강좌, 선진지견학, 다문화가족연계프로그램

〈표 2-10〉 충청남도 농어촌복지 사업 추진현황

구분	추진 시책
충남 농정과 도농상생복지팀 농어촌복지 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 리더십아카데미 지원

4) 소결

□ 농어촌 인구 구조 특성 상 여성농어업인 대상 복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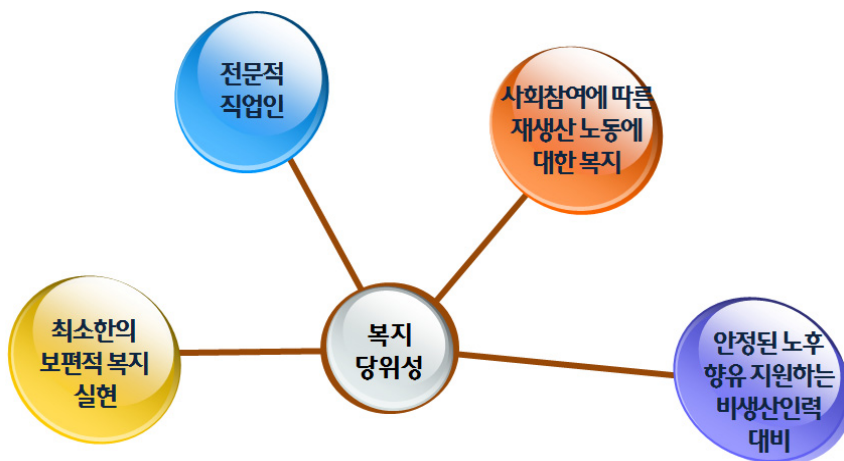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과소화, 노령화,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에 여성농어업인 대상의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 여성농어업인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

여성농어업인은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다.

□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 계획 수립의 당위성

첫째, 전문 직업인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둘째, 일과 가사 병행이라는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영역 필요,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농 격차 해소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건강, 문화라는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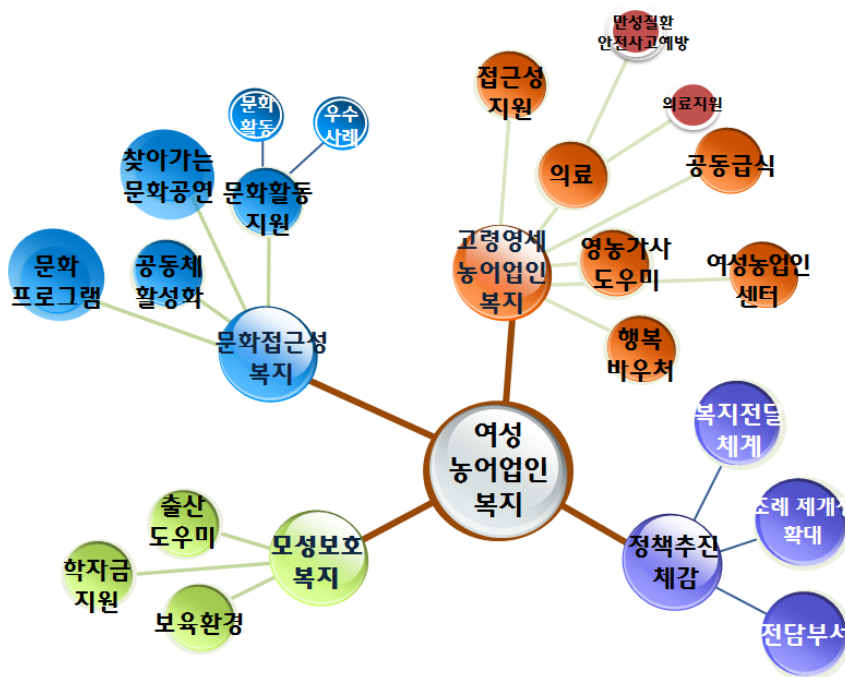
(그림 2-1)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의 기본전제 및 당위성

□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계획에서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수요 높음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재정계획에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부분이 6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8.8%를 차지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가 높았으나, 충남 계획에서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 재정이 79.3%로 가장 높게 수립되어 복지·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건강 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시책 분석 결과 의료, 교통, 행복바우처, 문화활동에 대한 사업이 여성농업인 복지 부문의 시급한 정책으로 도출

행복바우처 사업은 자긍심을 높여주는 직업적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정책수요가 높으며, 출산도우미, 보육환경개선, 의료지원, 농촌형교통서비스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문화활동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농업·경영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관련조례 제정·확대,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그림 2-2) 여성농어업인 복지 세부 계획 키워드

〈표 2-11〉 여성농어업인 복지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종합

구분	계획	연구	추진 시책
모성보호 복지 서비스	출산전후 도우미	출산도우미	
	보육 및 돌봄센터 확대	보육환경개선	보육 및 돌봄센터 확대
	자녀학자금지원		자녀학자금지원
고령영세 농어업인 지원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의료 지원	건강검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복꾸러미(체감형복지)		
	정주환경 개선		
	교통접근성 지원	통학 교통제공	
	영농도우미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 가사도우미	
	공동급식	농번기 공동급식	농번기 공동급식
	취약계층 급여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연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바우처 지원	행복바우처 제도	행복바우처 제도
문화 접근성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활동 및 축제 지원	문화활동지원	
	공동체활성화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공간확대	
	문화활동 우수사례발굴		
소득 제고		공동소득활동 지원	
		여성 농기업 CEO 발굴	
정책 추진 및 체감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업인육성관련 조례 제정·확대	
		복지전달 정보효율화	
			농촌재능나눔
			리더십아카데미 지원

2. 바우처 정책 고찰

1) 문화바우처 정책의 이해¹⁶⁾

(1) 문화바우처 개념

문화바우처는 소위 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수단이다. 경제적으로 인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없는 계층에 대해 접근성을 강화시킴으로 문화향유기회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문화바우처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정해진 정책대상에 대해서만 혜택이 지원 되기에 문화 향유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¹⁷⁾는 카드 1장당 6만원 금액이 부여되어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는 형식이며, 카드 바우처는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장 발급이 가능한 후기명식 카드제를 도입하였다. 후기명식 카드란 카드번호가 미리 기재된 카드로 카드 발급 신청 즉시 온라인에 사용자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층이며 1가구당 카드 1매를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지원금액 및 대상자

· 지원금액(2017년 기준)

- 대상 세대의 개인당 6만원 카드 1매 발급(발급 매수 제한없음)
- 6세(2011.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발급가능

16)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unhwanuricard.kr> 참조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cacf.or.kr> 참조

이경림, 2012,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가능 카드

•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표 2-12〉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 사용처

문화예술프로그램, 여행상품, 스포츠관광 상품, 전국 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국 가맹점은 현재 23,82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표 2-1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분	내용
문화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화방, 음반판매점, 문화센터, 서점,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사진관
여행	숙박: 호텔, 콘도,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운송수단: 항공(대한항공 제외),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여객선, 렌트카 관광여행사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온천
스포츠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국제 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4) 발급시기 및 발급절차

발급 시기는 주민센터의 경우 2월부터이며 온라인의 경우 3월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수혜자를 모집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에 이용을 마감한다.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인 경우 신청자 확인 후 현장에서 수령 후 사용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을 승인 후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 가능하다.

〈표 2-14〉 문화누리카드 발급시기

구분	시기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카드발급 시작일	2017년 2월 17일(금)~11월 30일(목)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카드발급 개시	2017년 3월 1일(수)~11월 30일(목)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2017년 12월 31일(토)



〔그림 2-3〕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자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5) 사업추진별 역할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체계별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주관처와의 매칭으로 기획사업의 방향을 협의하고 사업 성과와 정산보고를 통해 지역주관처의 사업을 평가한다.¹⁸⁾

(6) 운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운영을 통해 카드 온라인 발급, 재충전, 카드 사용 및 잔액확인, 특별 할인 상품, 사용 가맹점 소개 등 다양한 관리·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2-4) 문화누리카드 관리 홈페이지

자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18) 이경림, 2012,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7) 문화바우처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¹⁹⁾

문화바우처의 효과는 첫째, 저소득층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이 증진된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의 기회를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 등으로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문화향수권 보장으로 전 국민의 문화경쟁력 강화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접근성 강화로 잠재력을 깨워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과 국민 개개인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문화복지정책에 부합하는 목적의 설정이 필요하다. 문화적 격차 해소 지향을 위한 초기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 바우처 정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소외 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인 계층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 거주자등 문화적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문화카드 이용률 확대를 위한 가맹점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23,821개의 가맹점이 있고 인터넷을 통한 활용도 가능하나, 실제 수혜자 계층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비교적 낮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터넷 활용도가 낮고 가맹점까지의 접근성도 어렵다. 이에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니즈(Needs)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가맹점을 발굴 및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문화바우처의 홍보강화와 문화복지사제도 도입이다. 문화바우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저소득층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바우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 및 사용율이 다소 낮은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으로 문화복지사를 지방행정기관이나 문화기반시설 등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이경림, 2012,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71

2) 행복바우처 정책의 이해

(1) 행복바우처 개념

행복바우처사업의 추진 근거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과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근거로 농어촌지역의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과 동시에 여성농업인들 끼리의 문화 공동체(공동영화보기 등)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발행된 복지카드로 지역경제에서 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각 도별로 행복바우처, 복지바우처, 브라보바우처 등으로 불리우며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청도에서 2012년 첫 시행 이후 2015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2016년 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 충청도, 전남도, 경남도, 경북도에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원금액 및 대상자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도마다 모두 다르며 10만원~20만원(자부담2만원~4만원)
- 도와 시군 부담과 자부담으로 구분

• 지원대상

- 지자체 사업이기에 대상자의 기준도 지자체별로 다르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초기에는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65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다가 현재 충북, 충남, 전남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중복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업 규모에 제한을 두어 대상자를 한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 또한 사업초기에는 2만㎡, 3만㎡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다가 폐지한 시군도 있으나 현재

20) 오미란외,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부, p.156

3만㎡미만(경북, 경남)과 5만㎡미만(충북, 강원, 전북, 충남)으로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농어업인 범위 및 기준은 부록 참조).

〈표 2-15〉 지원대상 및 제외(충남도 사례)

구분	내용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요건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 1. 1. ~ 1997. 12. 31.까지 출생자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어업외 전업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단,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 준용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지 원 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자 등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등)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농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인 경우 지원 가능

(3) 사용처

행복바우처는 보건, 문화, 복지, 관광서비스 관련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문화바우처와는 다르게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2016년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다. 영화, 공연, 서점, 전시,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화장품점, 목욕탕, 스포츠용품점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2016년까지 충청북도에서 의료비 카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근거하여 의료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도에서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하였으나, 경상북도만 경북과 대구지역에서로 사용처를 한정하였다. 또한 전북에서는 (주)인터파크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내 작은영화관과 독립영화관에서의 영화관람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서점까지의 접근성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다. 2017년 처음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충남의 경우 수혜자들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상남도도 고속버스와 철도 비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행복바우처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다르게 도차원에서 추진되어 사용처 확대 및 협의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처 확대 및 수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능력 및 노력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4) 신청시기 및 발급절차

발급시기는 연초에 신청을 시작하여(전북은 익월 12월부터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 발급절차는 복잡한 편으로 문화바우처와 같이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이장 확인 등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수혜자 확정시 수혜자가 농협중앙회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교부받아야 한다. 농어촌마을에서 농협중앙회 소재지까지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기에 발급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

〈표 2-16〉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충남도 사례)



(5) 사업추진별 역할

- 도지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농협은행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여성농업인 :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선정 시 카드발급신청 및 자부담액을 농협에 납부

3) 소결

□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의 사업 목적이 유사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는 사업 대상자가 다르지만 목적이 유사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접근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추진 주체의 차이로 인해 사업 운영의 용이성과 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문화바우처와 광역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행복바우처는 추진·운영부문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행복바우처는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용처를 찾기 어려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매우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각의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목적은 동일하나, 목적에 따른 가능 사용처가 달라 향후 농어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행복바우처의 경우 가맹점까지의 접근성이 낮고 온라인 사용도 불가능하여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가맹점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힘들고, 온라인 사용도 불가능하여 카드 사용의 집행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의 경우 온라인 사용 및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여 카드 발급 및 사용이 매우 용이하다.

□ 각 도차원에서 추진되기에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른 사업 추진율과 업무 증가 우려

일선 공무원에 의한 가입률 향상, 가맹점 증가, 집행을 증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가 우려된다. 행복바우처로 인한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바우처와 같이 체계적인 운영 및 사용자들에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 예산확보의 안정성

문화바우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기에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담보되나, 행복바우처의 경우 도와 시군 그리고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에 도에서의 의지가 있더라도 시군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표 2-17〉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 비교

구분	문화바우처	행복바우처
목적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기회제공 문화 양극화 해소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세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 ~ 73세 미만
주체	국가	도
발급	당해연도 2월(주민센터), 3월(온라인)	단계별 발급(대부분 하반기)
사용처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운영관리 지원	홈페이지 운영	담당 공무원
발급절차	간단 (주민센터·현장수령가능 온라인·실시간 신청 승인 후 카드 수령)	복잡 (신청서 교부, 자격 확인, 확정통보받음, 농협으로 직접 카드 신청 및 교부)
지원금액	개인별 6만원(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간 10~20만원(자부담 2만원~4만원 포함)
사업추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총괄 17개 광역시·도 주관	도지사, 시장군수·시행지침 및 계획수립 읍면동장·신청접수, 선정, 점검, 홍보 농협·사업비 집행
예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도비, 시군비, 자부담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를 위한 기초 생계형 문화복지 사업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제3장 행복바우처 정책의 지침 분석²¹⁾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정책 지침 현황

1) 목적 및 방향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접 신청과 수혜자 일정 금액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농협연계 카드 지원하고 있다.

※ 사업의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2) 정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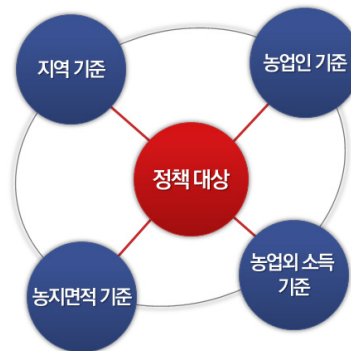
- (지역 기준, 농업인 기준) 충남 농어촌지역에 거주,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전업 및 1종 겸업농)
-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지원
- (농지면적 기준)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이 20,000㎡ 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21)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광역 도의 지침 참조 분석

- (농업의 소득 기준) 가구당 농어업의 소득이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가구(가구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자녀, 부모 제외))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여성농어업인 본인이 기초연금,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일 경우 지원 제외)
- 2중 겸업농가(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그림 3-1) 정책 대상의 기준

3) 예산 및 사업량

- 연간 가구당 지원액 : 15만원(3만원 자부담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표 3-1〉 2017년 사업비 현황(단위:명,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2,570	6,385,500 (100%)	1,532,520 (24.0%)	3,575,880 (56.0%)	1,277,100 (20.0%)

〈표 3-2〉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가구,천원)

시군별	대상 가구수	예산 지원계획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2,570	6,385,500	1,532,520	3,575,880	1,277,100	가구당 150천원
천안시	3,298	494,700	118,728	277,032	98,940	
공주시	3,020	453,000	108,720	253,680	90,600	
보령시	3,241	486,150	116,676	272,244	97,230	
아산시	3,231	484,650	116,316	271,404	96,930	
서산시	5,329	799,350	191,844	447,636	159,870	
논산시	3,532	529,800	127,152	296,688	105,960	
계룡시	271	40,650	9,756	22,764	8,130	
당진시	5,238	785,700	188,568	439,992	157,140	
금산군	1,020	153,000	36,720	85,680	30,600	
부여군	3,543	531,450	127,548	297,612	106,290	
서천군	1,629	244,350	58,644	136,836	48,870	
청양군	1,331	199,650	47,916	111,804	39,930	
홍성군	2,909	436,350	104,724	244,356	87,270	
예산군	3,039	455,850	109,404	255,276	91,170	
태안군	1,939	290,850	69,804	162,876	58,170	

※ 보조 기준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 도내 농가인구 329,000명 중 여성농업인 170,000명(51.7%)

○ 농어촌 가구수 : 144,564호(농가 135,335, 어가 9,229)

○ 연령별(20~64세) 여성농업인 80,240명, 전업농가 72,282호

자료 : 충청남도, 2017, 2017년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행복바우처) 시행계획(안),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4)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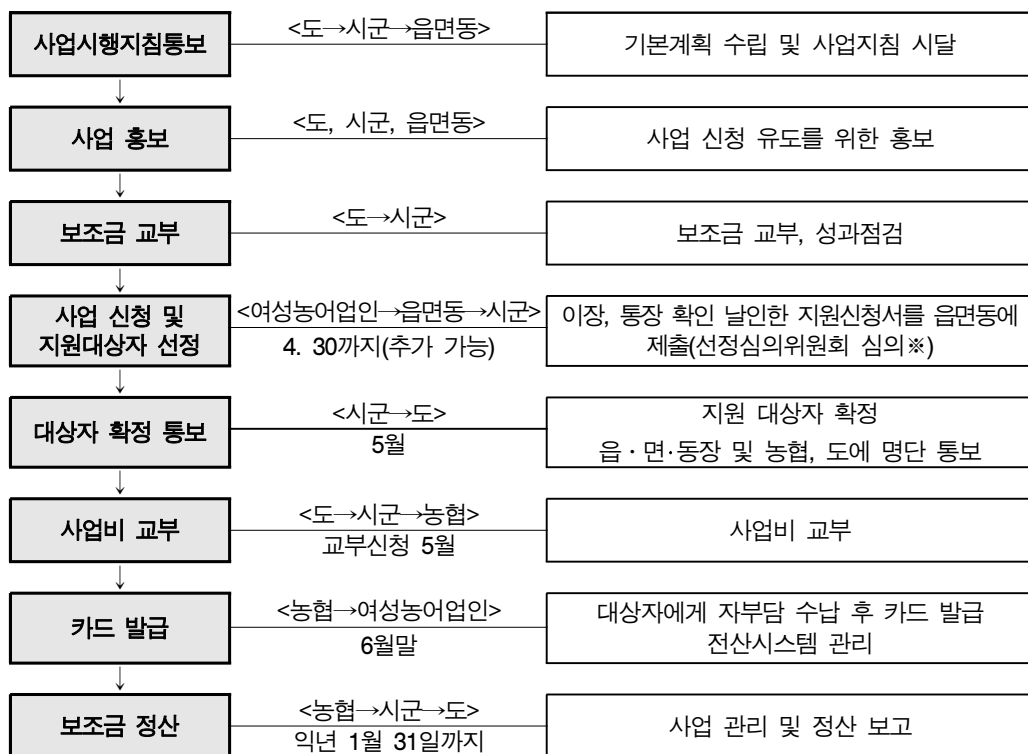
○ 17개 업종 + 농협하나로마트

- 의료기기 및 용품, 공연장·전시장·경기장, 관광업, 미용원, 사진관, 산후조리원,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 농협, 전통시장을 제외한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함

5) 사업절차

〈표 3-3〉 추진체계



※ 카드 사용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목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구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회원, 농어업인 등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 자격 검토

6) 홍보

- 도
 - 포스터 제작, 마을방송 문구 배부,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추진
- 시·군
 - 읍면동 담당자 대상 사업지침 설명 및 적극적인 홍보
 - 읍·면 신청접수 현황 지속점검 및 읍면 지도점검 순회
- 농협
 -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 마을 방송
 - 행복바우처 홍보 포스터 및 마을방송 문구 배부
-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포스터

※ 사업대상자 리스트 작성, 직접적인 컨택을 통한 사업 홍보 불가

- 충남도 정보화정책과 문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활용 불가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1) 목적 및 사업시행

모든 도차원에서 문화 서비스 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목적도 대부분 담고 있다. 2017년 신규 사업을 시작한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건강관리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건강부문에 대한 의료부문에 사용가능하였던 행복바우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제외되어 2017년도부터 의료비 관련업종 제외되었다. 이에 실제 건강에 대한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3-4〉 지자체별 행복바우처 추진 목적

구 분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건강	○						○	○	○
문화	○	○	○	○	○	○	○	○	○
복지	○		○	○	○	○		○	○
여가		○	○			○			

주. 순서는 사업의 추진 확대 순서로 작성함

2) 사업명 및 추진시기

대부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충남과 전남은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경남의 경우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다.

사업은 충북에서 2012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경기도 2014년, 강원도 2015년, 전북과 제주 2016년 그리고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 2017년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 확산 경과

- 2012년 충북도 첫 시행
- 2014년 경기도 사업 시행
- 2015년 강원도 사업 시행
- 2016년 전북도·제주도 사업 시행
- 2017년 충남도·전남도·경남도·경상남도 시행

〈표 3-5〉 지자체별 사업명

사업명	지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행복카드	충청남도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충청북도 경기도 제주도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강원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경상남도

3) 정책대상

정책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바우처의 목적을 농어촌 직업여성인에 대한 복지 사업으로 보았을 때 고령화된 농어촌의 만 65세는 실제로 젊은 층에 해당하고, 농어촌에서는 70대, 80대에도 노동력 지원이 활발하기에 충남과 전북은 만 70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충북의 경우 만 73세로 가능한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침을 변경하였다.

전북의 경우 35세 이상이었던 지원연령을 확대하여 만25세로 수정하였다. 25세 연령을 확대한 것은 대학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여성농업인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주 여성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20~24세 기혼자 특례지원을 포함하였다. 또 다른 이주여성

특례지원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 3-6〉 지자체별 정책대상 연령

구분	이 상				이 하			
	없 음	만 20세	만 25세	만 30세	만 65세	만 70세	만 73세	없 음
도	제주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전북(기혼)	전북	경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경북 경남	충남 전남	충북	

또한 정책대상의 지원기준인 농지소득면적을 살펴보면 충남을 비롯한 충북, 강원, 전북의 경우 5만㎡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017년 첫 시도하는 경북과 경남의 경우 3만㎡ 미만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와 제주를 포함한 전남의 경우 농지소득면적 기준을 제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예산 및 사업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나, 모든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다른 기준에 의한 정책 대상이 아닌 동일한 기준에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표 3-7〉 지자체별 지원기준

구분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지원 대상	만 20~70세	만 20~73세	만 20~65세	만 20~65세	만25~65세 만20~24세 기혼여성농 업인	만65세 미 만	만 20~70세	만 30~65세	만 20~65세
지 원 기준	5만㎡ 미만	5만㎡ 미만	-	5만㎡ 미만	5만㎡ 미만	-	폐지	3만㎡ 미만	3만㎡ 미만

4) 예산 및 사업량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지원금액은 10만원~20만원이다 이중 2만원~4만원은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다.

충남의 경우 15만원(자부담 3만원) 지원되며, 지원 비율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0만원(자부담 2만원)이었다가 2017년 2배인 20만원(자부담 4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부담의 경우 대부분 20% 비율로 구성되나,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한 충북의 경우 자부담 12.5%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업량은 전남, 충남, 충북 순이며, 경기도는 사업 추진 시기는 빠른 편이나 2,500명으로 사업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량은 충북의 경우 2016년 37,680명에서 2017년 40,910명으로 증가되었고, 전북의 경우도 2016년 11,374명이었다가 2017년 15,000명으로 증가되어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다.

〈표 3-8〉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량

구분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지원 금액	15만원 (자부담 3만원)	16만원 (자부담 2만원)	20만원 (자부담 4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2만원 (자부담 2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5만원 (자부담 3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비율 (도비 시군비 자부담)	24%, 56%, 20%	35%, 52.5%, 12.5%	24%, 56%, 20%	30%, 50%, 20%	25%, 58%, 17%	도 80, 자부담 20%	20%, 60%, 20%	24%, 56%, 20%	30%, 50%, 20%
사업량 (명)	42,570	40,910	2,500	10,000	15,000	6,300	52,000	15,000	20,000
사업비 (백만원)	6385.5	6,546	500	1,000	1,800	630	6,240	2,250	2,000

주. 경기도는 2016년 10만원, 자부담 2만원

5) 사용처

행복바우처 카드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사용이 가능하다.

〈표 3-9〉 지자체별 사용처 현황

업종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비고
합계				16	18	14	27	25	21	24	20	25	
의생활	신변잡화	안경점	1204	○	○	○		○	○	○	○	○	
유통	농협 판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4111	○									
		농기계수리점	4113			○							
여행	숙박	특급관광호텔	5501				○						
		일반관광호텔	5502				○						
		기타관광호텔	5503				○		○	○			
		펜션/민박	5504	○	○		○	○	○	○	○	○	
		기타숙박업	5505				○			○			
	운송 수단	항공사	5601										
		고속버스	5602									○	전북 협의 진행중
		철도	5603									○	"
	관광 여행	관광여행사	5701				○	○		○		○	
		관광기념품점	5702				○	○		○		○	
레포츠/ 문화/ 취미	레저/ 스포츠	스포츠용품점	6001	○	○		○	○	○	○	○	○	
		레저용품점	6002	○	○		○			○	○	○	
		테니스장	6006				○						
		볼링장	6007				○						
		스키장	6008				○						
		수영장	6009	○	○		○	○		○	○	○	
		종합스포츠센터	6010	○	○	○	○	○	○	○	○	○	
		놀이공원	6012		○	○	○	○	○	○	○	○	
		레포츠 클럽	6013					○				○	
		요가	6016	○		○	○	○	○	○		○	

	문화/ 취미	영화관	6101	○	○	○	○	○	○	○	○	
		공연장/전시장	6102	○	○	○	○	○	○	○	○	
		경기장	6103	○				○	○		○	
		사진관	6105	○	○		○	○	○	○	○	
		서점	6106		○	○	○	○		○	○	
		화원	6109	○	○		○	○	○	○	○	
		음반판매점	6117			○	○	○	○	○		○
		비디오및도서대여점	6118				○					
		문화/취미 기타	6199				○	○	○	○		○
		문화센터	7706								○	
의료/ 미용	의료기관 /제약	종합병원	7001									2017 충청경기 제외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
		일반,치과,한의원	7003									"
		건강진단센터	7004									"
		약국	7005									"
		한약방	7006	○		○						"
		산후조리원	7010									"
		의료기기및용품	7011	○	○	○		○		○	○	
	미용	미용원	7102	○	○	○	○	○	○	○	○	
		피부미용원	7103	○	○	○		○	○		○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	○	○	○	○	○	○	○	
		화장품점	7105	○	○	○	○	○	○	○	○	
		미용재료	7106	○	○	○		○	○		○	

주.

- 합계는 코드별 수의 합계 의미 아님
- 충남 공연장(6102,6103), 미용원(7102,7103,7106), 스포츠레저용품(6001,6002), 스포츠센터 및 요가(6010,6016)
- 제주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 경기 미용(7102, 7106)
-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전국사용가능
- 강원도는 강원도 내에 한해서 사용 가능
- 경북은 모든 항목은 경북대구에 한해서 사용 가능(인터넷에서는 사용불가)

6) 사업절차 및 추진체계

사업절차 및 추진체계는 충남도와 유사하나 사업신청 시기,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시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영농 조사 여부, 대상자 확정 시 중복지원여부 기준 등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7) 신청기간

사업 신청시작일(2017년 기준)은 전북이 익년 1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강원·전남·경남이 1월부터이며 제주 2월, 충남·충북·경기도는 3월부터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사업신청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기 사업이 추진된 지자체 사례분석 결과 1차~4차까지의 사업신청 기간을 두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1월까지 사업 신청을 추진 하였다. 카드 발급이 늦어지면 카드 사용기간이 짧아지기에(12월 말 정산, 잔액 소멸) 가맹점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은 농어촌의 경우 카드 사용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사업 추진일정을 전북과 전남 그리고 강원과 같이 연초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면 사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이해 및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신청자가 낮을 수밖에 없기에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일선 공무원의 홍보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10〉 사업 추진 시기

구분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신청 시기	3.1~	3.20~	3월	1월~	익년 12. 21	2월~	1월~	5. 19~	1월~

주. 신청일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8)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도별로 특이한 사항 및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농어업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충북과 경기도의 경우 작년까지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가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의료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이주여성배려와 접근성 배려차원에서 인터넷 가맹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인터파크에서 결제가 가능하여 작은영화관 및 인터넷 서점에서 서적구매가 가능하고, 가맹점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사업 시행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11〉 변경 및 특이사항

구분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충남	• 농협 하나로 마트(농어업인 편의성)
충북	• 연령(20~73세 미만) / 업종(의료비 삭제) / 사업량 확대
경기	• 사업비 2배 상향(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 업종(의료비 삭제)
강원	• 카드발급절차(신청자 동의하에 읍면동 담당자가 농협 시군지부에서 대행 발급가능) • 업종 추가 / 소득금액(농외소득 연간 4,800만원 이하인 자) 수정 • 신청인(전업농) / 강원도내에 한해서 사용
전북	• 지원연령 확대 • 이주여성배려(농업인증증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에게 확인 후 지원) • 업종 추가(※인터파크-작은영화관과 독립영화관에서 결제가능, 온라인서점) • 가맹점 6,341개소에서 8,100개소로 늘림 / 가맹점에 스티커 부착 • 작성서식 간소화 / 사업량 50% 감소
제주	• 지원범위확대(동지역 포함) • 연령확대(만30세 이상 기준 삭제) • 업종확대(안경점, 경기장(관람), 미용원)
전남	• 52,000명으로 혜택 • 연령확대(만65세에서 70세) • 기준 폐지(기존 3만㎡ 폐지)
경북	• 경북·대구에 한해서 사용
경남	• 고속버스, 철도 사용가능

9) 종합

충남을 비롯한 각 도의 행복바우처 지침을 목적, 추진내용, 사용범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추진시 타 도차원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12〉 충남 행복바우처와 타 지자체 비교

구분	충남	타 지자체
목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초기 의료부문 가능하였다가 제외
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여성농어업인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여성농어업인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
면적기준	5ha	전남 : 폐지
주체	도	도
예산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자부담
운영관리 지원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발급	1차 모집 3월~4월 2차 모집 7월~8월 단계별 발급(대부분 하반기)	전북 : 익년 12월~ 상반기
사용처	온라인 사용 불가 농협하나로 마트 한약방	경기도 : 농기계수리점 전북, 경남 : 고속버스, 철도 강원 : 불링, 스키 전북 : 인터넷 서점 경북 : 문화센터 경기 : 한약방
발급절차	복잡 (신청서 교부, 자격 확인, 확정통보받음, 농협으로 직접 카드 신청 및 교부)	강원 : 대행발급 전북 : 서식 간소화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경기 : 20만원(자부담 4만원)
사용범위	전국사용	강원도 : 도내 경북 : 도내, 대구

〈표 3-13〉 전국 도의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총복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사업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행복카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브리모 바우처
시작 연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이용 목적	여가, 문화활동	복지(여가·문화) 직업적 자금신청	문화, 서비스	문화, 서비스	문화, 스포츠, 여행	건강, 문화, 복지	건강관리, 문화활동	건강·문화·복지	건강관리, 복지·문화
지원 대상	민20~73	민20~65	민20~65	25~65세 20~24세: 기혼 여성농업인	민65세 미만	민20~70	민20~70	민30~65	민20~65
지원 기준	5만 [㎡] 미만		5만 [㎡] 미만	5만 [㎡] 미만		5만 [㎡] 미만	폐지	3만 [㎡] 미만	3만 [㎡] 미만
지원 금액	16만원 (자부담 2만원)	20만원 (자부담 4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2만원 (자부담 2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5만원 (자부담 3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15만원 (자부담 3만원)	10만원 (자부담 2만원)
사업량	40,910명(2016년 37,680명)	2,500명	10,000명	15,000명	6,300명	42,570명	52,000명	15,000명	20,000명
사업비	6,546백만원 (도비 2,291 시군비 3,437 자부담 818)	500백만원 (도비 120, 시군비 280, 자부담 100)	1,000백만원 (도비 300 시군비 500 자부담 200)	1,800백만원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300)	630백만원 (도비 504, 자부담 126)	6385.5백만원 (도비 1,532 시군비 3,575 자부담 1,277)	6,240백만원 (도비 1,248 시군비 3,744 자부담 1,248)	2,250백만원 (도비 540 시군비 1,260 자부담 450)	2,000백만원 (도비 600 시군비 1,000 자부담 400)
지원 비율	도비 35%, 시군비 52.5%, 자부담 12.5%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도비 25%, 시군비 58%, 자부담 17%	도 80, 자부담 20%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신청 시기	3.20.~	3월 ~ 3. 31	1월~	'16. 12. 21 ~	2월~	3. 1. ~	1월~3월(사업비 소진시)	5. 19~	1. 23~
사용	18개 업종	14개 업종	27개 업종	25개 업종	21개 업종	16개 업종	24개 업종	20개 업종	25개 업종

제4장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분석

1.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²²⁾

1) 추진내용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사업은 2015. 5월 제54차 충남여성포럼에서 정책으로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 후 충남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행복바우처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농촌지역 거주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 소득비중 : (1980) 95.9% → (2015) 64.4%)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추진경과

- 제54차 충남여성포럼에서 정책도입 제안(2015. 5)
- 제4차('16~' 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반영
 -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2015.11)
 - 2016년 도민인권 증진시책, 2017년 시책구상 역점시책 계획에 반영(2016. 3, 2016. 7)
- '17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마련('16. 12월)
- 행복바우처 카드(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道↔농협 충남본부)
- '17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 17. 3~4월)
 - 신청인원 : 9,439명(사업량 42,570명 대비 22.1% 신청)
- 타도 사업 추진사례 벤치마킹(충북·전북, '17. 4월)
- 시군 및 읍면동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 분석(' 17. 4~5월)

22) 충청남도 농정국, 2017, 내부자료 활용

- '17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협의(보건복지부, ' 17. 5~6월)
 - 변경사항 : 연령(65세→70세), 면적(2ha→5ha), 농외소득(기준 삭제)
- '17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신청 접수('17. 7~8월)
 - 7.22일 12,187명(사업량 대비 28.6%) 신청
- '17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완료시점('17. 8.31 기준)
 - 8.31일 28,792명(사업량 대비 67.8%) 신청

2) 충남 행복바우처 사업량 계획 및 예산 지원

충남 농업인 농지소유면적과 축산임업인, 어업인 추정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시군별로 예산 수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4-1〉 2017년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수요조사 결과(2016.8)

(단위:명)

시군별	합계	농업인(A/규모별)		축산· 임업인(B)	어업인 (C/추정치)	동의 여부 (예산수반)
		0.1~0.3ha	3.0~5.0ha			
계	76,690	57,782	4,565	9,342	5,001	전체동의
천안시	7,300	6,430	290	580	0	○
공주시	5,234	3,877	479	878	0	○
보령시	6,539	2,633	188	867	2,851	○
아산시	5,700	4,500	500	650	50	○
서산시	12,958	11,584	848	347	179	○
논산시	6,308	4,583	351	1,329	45	○
계룡시	799	768	1	30	0	○
당진시	11,256	8,171	379	2,017	689	○
금산군	500	430	20	50	0	○
부여군	6,700	5,200	500	1,000	0	○
서천군	1,207	923	94	40	150	○
청양군	774	675	27	72	0	○
홍성군	4,215	3,108	150	860	97	○
예산군	4,700	3,500	600	500	100	○
태안군	2,500	1,400	138	122	840	○

자료 : 충청남도 농정국, 2017, 내부자료

도내 농가인구 329천명 중 여성농업인 170천명(51.7%)이며, 농어촌 가구수는 144,564호(농가 135,335, 어가 9,229)이다. 초기 충남 행복바우처 연령기준인 20~64세 여성농업인 수는 80,240명(전업농가 72,282호)이다. 이에 기초하여 초기 76,690명(농업인 62,347, 축산임업인 9,342, 어업인 5,001)의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추진 시 최종 결정된 대상 수는 예산 확정에 따라 42,570명이며 향후 예산 확보에 따라 대상자수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표 4-2〉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가구,천원)

시군별	대상 가구수	예산 지원 계획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2,570	6,385,500	1,532,520	3,575,880	1,277,100	가구당 150천원
천안시	3,298	494,700	118,728	277,032	98,940	
공주시	3,020	453,000	108,720	253,680	90,600	
보령시	3,241	486,150	116,676	272,244	97,230	
아산시	3,231	484,650	116,316	271,404	96,930	
서산시	5,329	799,350	191,844	447,636	159,870	
논산시	3,532	529,800	127,152	296,688	105,960	
계룡시	271	40,650	9,756	22,764	8,130	
당진시	5,238	785,700	188,568	439,992	157,140	
금산군	1,020	153,000	36,720	85,680	30,600	
부여군	3,543	531,450	127,548	297,612	106,290	
서천군	1,629	244,350	58,644	136,836	48,870	
청양군	1,331	199,650	47,916	111,804	39,930	
홍성군	2,909	436,350	104,724	244,356	87,270	
예산군	3,039	455,850	109,404	255,276	91,170	
태안군	1,939	290,850	69,804	162,876	58,170	

※ 보조 기준율(%) :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3) 가입현황

초기 3월 말 8.6% 가입률에서 1차 신청기간 완료시 22.2%의 가입률을 보이다가 2차 신청 마감 시(8월 31일 기준) 67.6% 가입률로 많이 향상되었다. 이는 타 시도에서 선행적으로 추진된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효과적이었으나,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여성단체와 연계한 홍보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 2017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 현황(8.31기준)

(단위:명,%)

구분	배정 인원	1차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	
		3.31.기준 신청인원 및 비율		4.30.기준 총 신청인원 및 비율		8.31.기준 총 신청인원 및 비율	
합 계	42,570	3,676	8.6%	9,438	22.2%	19,354	67.6
천안시	3,298	4	0.1%	418	12.7%	962	41.8
공주시	3,020	190	6.3%	366	12.1%	1,403	58.6
보령시	3,241	98	3.0%	801	24.7%	1,188	61.4
아산시	3,231	80	2.5%	272	8.4%	1,329	49.6
서산시	5,329	373	7.0%	632	11.9%	1,784	45.3
논산시	3,532	317	9.0%	573	16.2%	1,444	57.1
계룡시	271	43	15.9%	43	15.9%	17	22.1
당진시	5,238	145	2.8%	333	6.4%	1,671	38.3
금산군	1,020	43	4.2%	398	39.0%	809	118.3
부여군	3,543	620	17.5%	2,025	57.2%	1,761	106.9
서천군	1,629	228	14.0%	412	25.3%	1,158	96.4
청양군	1,331	167	12.5%	533	40.0%	703	92.9
홍성군	2,909	140	4.8%	764	26.3%	2,106	98.7
예산군	3,039	469	15.4%	793	26.1%	1,591	78.4
태안군	1,939	759	39.1%	1,075	55.4%	1,428	129.1

4) 사업의 문제점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 인지도 부족 및 짧은 신청 기간이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직불금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등 읍면 업무 가중으로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홍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기간이 짧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타 도에 비해 엄격한 지원 기준이다. 충남은 연령(65세 미만), 면적(2ha 미만), 농외소득(2,200만원 미만) 등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및 읍면동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수렴한 결과 대상자 기준 완화, 서류 간소화, 일정 변경 요청, 행정망 이용권한 요청, 카드 수령의 불편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표 4-4〉 개선요구사항

구분	건의사항	반영사항
천안시	지원대상 중 거주지 기준을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요구	당초 사업 목적대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공주시		지침 변경
보령시	연령기준 확대 요구	지침 변경
아산시	농외소득 확인 관련 서류 발급 간소화	반영
서산시	면적기준 확대 요구	반영
논산시	접수기간 중 지침이 변경되어 업무 혼선 초래 및 민원발생 쌀직불제의 농업의 소득기준에 비해 제한이 엄격, 완화 필요	반영
계룡시	직불제 사업 및 영농시기와 일정이 겹쳐 신청이 저조	사업 신청시기는 내년부터 1월경으로 앞당길 계획
당진시	민원 서류 간소화, 농외소득 확인 곤란 직불제 사업과 시기 중복, 연령 확대 필요	반영
금산군	사업 홍보기간이 짧아 여성농업인들의 이해 부족	추가 접수기한 설정 및 지속적 홍보 추진 계획
부여군	연령, 면적, 농외소득 기준 완화	반영
서천군	연령, 면적, 농외소득 기준 완화	반영
청양군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반영
홍성군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반영
예산군	-	
태안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필요(건강보험 소득), 구비서류 최소화 원거리 주민 카드수령 불편	지침 변경 검토 중 카드수령은 농협직원 출장발급 등 불편 최소화

5) 개선사항

□ 지침 개선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관련 기존 지침 상 문제점인 대상자 기준, 농어업의 소득 기준, 농업인 확인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표 4-5〉 충남 지침 개선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명칭		카드명칭 : 행복카드	
신청기간	1차 : '17. 3 ~ 4월	2차 : '17. 7 ~ 8월	
지원대상	전업농 및 1종 겸업농	전업농 겸업농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지원기준 명료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연령기준	만20세 ~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만20세 ~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현실 반영
면적기준	2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가구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가구	지원대상 여성 농어업인 범위 확대
농외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인 농어가	농외소득 기준 폐지	제출서류로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이주여성		결혼이주 여성으로 국적 미취득 사유로 농어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사용처	19개 업종	16개 업종 - 전통시장, 항공·철도·버스, - 산후조리원 지원 제외	농협 전산시스템 상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협의 시 제외 의견(산후조리원)
심 의 위원회	사업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행정절차 간소화
서식 추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확인서 행복카드 발급 위임장	필요서식 추가

□ 홍보방안 개선

도에서는 포스터 제작, 마을방송 문구 배부,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시군에서는 읍면동 담당자 대상 사업지침 설명 및 적극적인 홍보 독려, 읍·면 신청접수 현황 지속점검 및 읍면 지도점검 순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협에서는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 카드 발급 개선

카드발급 관련 지역농협과 협조를 통한 카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산시스템 상 시·군지부와 지역농협 간 연계는 불가하며, 자금보관 및 카드 전달 문제 등으로 지역농협 발급은 불가하여 차선택으로 카드발급 담당자가 읍면에 나와 카드발급을 추진하였다.

2. 타 지자체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1) 충청북도 행복바우처 운영실태

(1) 추진내용 및 경과

충청북도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2년부터 시행하였고 사업 첫 해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목표를 39,982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목표의 약40%인 16,150여명 지원하였다. 이후 연령기준 완화, 소득기준 삭제 등 사업기준 완화를 통해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입소문 등을 통해 사업인지도가 상승하여, 2017년 2월, 별도 홍보 없이도 사업신청 목표(약 40,000명) 달성하여 4월말까지 카드발급 완료하였다.

□ 목적의 경과

- 2012년 :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 2013~2016년 :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 2017년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

□ 사용처의 경과

2012년부터 사업 목적의 변화에 따라 사용처가 수정·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의료비 업종에도 사용가능하였다가 2017년도부터 의료비 관련업종이 제외(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되었다.

※ 의료비 관련업종 제외 사유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비는 건강보험(사회보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경우 개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지자체가 대신 납부하는 결과가 됨
-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국가에서 구축한 건강보험(사회보험)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1항 : 요양급여(의료비 지원)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 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한다.
-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될 경우 개인의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의료 이용이 유도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표 4-6〉 충청북도 행복바우처 사용 업종

구분	업 종
2012년	- 병·한의원 - 종합병원 - 영화관 -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2013년	- 병·한의원 - 한약방 - 약국 - 미용원 - 안경점 - 영화관 - 공연장·전시장 -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2014년	- 병·한의원 - 한약방 - 약국 - 미용원 - 안경점 - 영화관 - 화장품
2015년	- 공연장·전시장 -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 목욕탕/찜질방
2016 (17개 업종)	- 안경점 - 종합스포츠센터 - 영화관 - 공연장/전시장 - 서점 - 의료기기 및 용품 - 미용원 - 피부미용원 - 찜질방/목욕탕/사우나 - 화장품점 - 미용재료 - 종합병원('17년 제외) - 병·한의원('17년 제외) - 치과('17년 제외) - 건강검진센터('17년 제외) - 약국('17년 제외) - 한약방('17년 제외)
2017년 (18개 업종)	- 안경점 - 종합스포츠센터 - 영화관 - 공연장/전시장 - 서점 - 의료기기 및 용품 - 미용원 - 피부미용원 - 찜질방/목욕탕/사우나 - 화장품점 - 미용재료 - 펜션/민박('17년 추가) - 스포츠용품점('17년 추가) - 레저용품점('17년 추가) - 수영장('17년 추가) - 놀이공원('17년 추가) - 사진관('17년 추가) - 화원('17년 추가)

(2) 충북 사업량 및 가입률

2012년에는 20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였으며, 2013년에는 20세 이상 ~ 70세 미만, 2017년 20세 이상 ~ 73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지침에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에게는 차액 지원하여 10만원(자부담2만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표 4-7〉 충북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지원비율	카드 발급실적률	비고
2012년	39,982	1,428(도 452, 시군 677, 자 299)	도비 34.7%, 시군비 52.0%, 자담 13.3%	16,150명 40.4%	·연령 : 20세이상~65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
2013년	29,723	4,344(도 1,500, 시군 2,251, 자 593)	도비 34.7%, 시군비 52.0%, 자담 13.3%	34,483명	·연령 : 20세이상~70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
2014년	34,239	4,969(도 1,716, 시군 2,573, 자 680)	도비 34.7%, 시군비 52.0%, 자담 13.3%	34,483명	·연령 : 20세이상~70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
2015년	36,070	5,312(도 1,838, 시군 2,757, 자 717)	도비 34.7%, 시군비 52.0%, 자담 13.3%	36,127명	·연령 : 20세이상~70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
2016년	37,680	6,029(도 2,110, 시군 3,165, 자 754)	도비 35%, 시군비 52.5%, 자담 12.5%	37,680명 100%	·연령 : 20세이상~70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
2017년	40,910	6,546(도 2,291 시군 3,437 자 818)	도비 35%, 시·군비 52.5%, 자담 12.5%	40,910명 100%	·연령 : 20세이상~73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충북도는 다른 도와 동일하게 수혜자 기준에 대한 확대 요청과 지급비에 대한 상향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여 현재 연령도 73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초기 목적이 건강검진에 따른 의료비부터 시작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인해 의료비 관련업종이 제외되어 목적이 건강을 제외한 문화·복지로 수정되었다.

유사 복지 비용과의 중복성 논란을 대응하여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65세 미만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원을 피하였고, 2013년 연령을 70세로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유사한 문화바우처 지원과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되 문화바우처 지원비 5만원 혜택받는 대상자에게는 행복바우처 비용 5만원을 삭감한 10만원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4) 만족도 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해마다 점차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다. 2014년 매우 만족 38%, 2015년 47%, 2016년 51%로 향상되고 있다.

주 사용처는 병·한의원인 40% 이상, 미용원 23.8% 순으로 도출되었으나, 2017년 의료비 사용이 제외되어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연령의 상향조정, 지원금액의 증액, 추진의 신속·편리함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7. 6 ~ 7. 22
- 설문대상 : 3,060명(읍·면별 30명씩)
 - 20세 이상 ~ 40세 미만(306명 / 10.0%)
 - 40세 이상 ~ 60세 미만(1,373명 / 44.9%)
 - 60세 이상 ~ 70세 미만(1,381명 / 45.1%)
- 조사방법 : 시군(읍·면)별 설문지 배포하여 조사 실시
- 주요내용 : 카드사용처, 대상연령 등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조사결과

〈표 4-8〉 충청북도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결과	비고
만족도		매우만족 : '14년) 38% → '15년) 47%(9% ↑) → '16년) 51%(4%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상승
주 사용처		병·한의원 (41.8%) > 미용원 (23.8%) > 약국 (21.5%) > 화장품 (7.5%)	2017년부터 의료비 사용 제외
요구사항	지원연령	75세미만이 34.6%로 가장 많음('16년도 - 70세미만, 34.1%)	지원연령 및 지원금액 상향 의견 다수
	지원금액	20만원이 59.6%로 가장 많음	('16년도 - 16만원, 18.7%)
	추가업종요청	스포츠용품점 (34.5%) > 펜션·민박 (29.7%) > 수영장 (15.9%) > 놀이공원 (15.7%)	모두 반영(2017년 가능)
	기타요청사항	고령화에 따른 지원대상 연령 상향 조정	반영 17년도(20세 이상 ~ 73세 미만)
		지원금 상향 조정 및 자부담 폐지	미반영
		신속한 카드발급 및 지원대상 조건 완화	

2) 전라북도 행복바우처 생생카드 운영실태

(1) 추진내용 및 경과

2016년 처음 사업을 추진한 전라북도 행복바우처 생생카드는 1차~4차 접수를 통해 수요 30,000명 중 11,347명이 신청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수요를 30,000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사업 첫째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목표의 약37%인 11,347명이 신청하였다.

2017년은 사업수요를 재산정하여 사업량을 50% 축소(15,000명)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신청률 제고를 위해 3차 접수부터 연령((35~65세 → 25~65세)과 면적(3만㎡ 미만 → 5만㎡)로 변경하여 추가신청을 받았다.

2017년 4월 기준, 전년대비 약31% 증가한 14,975명이 신청하였고, 올해 100% 카드 발급이 가능하였다. 타 도와 다른 점은 사업 신청을 익년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2016. 12. 21~2017. 2. 10)

□ 대상연령 완화 및 이주여성 특례

2016년 사업신청 시 연령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여론 수렴과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지역거주 여성농업인 중 25~65세 여성농업인, 20~24세 기혼 여성농업인을 대상 연령기준을 낮추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지원연령 확대 (35~65세 → 25~65세)

- 25세로 연령확대 : 대학 졸업 후(23세) 최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여성농업인 지원
- 20~24세 기혼자 특례지원 : 이주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혼자 특례지원

※ 이주여성 특례지원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

※ 제외대상

- 경종 :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 축산·수산 : 경종 5ha 소득 수준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부 문화바우처 등)
- 타 분야 사업자등록·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도시지역 거주자 제외
- 영농경력 1년 미만 제외 등

□ 추진경과

- 도·시군 분담비율, 사업량 등 협의(15. 1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15. 12. 10~16. 2. 25)
- 도·농협 업무협약(16. 2. 19)
 - 카드 도안, 운영 시스템 구축(16. 4월, 16. 3. 4~ 4. 1 / 4. 22)
- 1차 접수(5,846명, 16. 4. 25~ 5. 31 / 6. 17)
- 2차 접수(2,485명)
- 3차 접수(2,549명, 16. 7. 11~ 8. 31 / 9. 30)
- 기준완화
 - 농업인자녀학자금 수준으로 지원기준 완화(농지소유 3→5ha, 양식업 면적 등)
- 4차 접수 (467명, 16. 9. 1~ 26 / 10. 2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16. 9. 27~ 11. 4)
- 연령 확대 : 35~65세 → 20~70세 (단계적 완화 / 17년 25~65세)

- 가맹점 확대(작은영화관, 인터파크, 16. 9~10월)
- 시군 제도개선 의견수렴(16. 10. 25~11. 9)
- 카드 사용자 설문조사(16. 11. 29~ 12. 5)
- 도·시군농협 제도개선회의(16. 12. 8)
- 2017년 사업지침 시달(16. 12. 15.)
- 홍보물 배포(포스터, 취급점 스티커, 16. 12. 20)
- 17년 사업신청·접수(16. 12. 21~ 17. 2. 10)
- 온라인 서점 개설협의(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16. 12~17. 1)
- 교통관련 업종 추가관련 협의(철도청, 고속버스, 16. 12~17. 1)
- 도청 대표 홈페이지내 안내창구 개설협의(16. 12~17. 1)

(2) 사용처

□ 업종확대 및 가맹점 확대 노력

- 업종은 2016년 16개 업종에서 2017년 25개 업종으로 9개 증가
- 가맹점은 8,100개소(2016년 10월 기준)에서 14,127개소(2017년 1월 기준) 6,027개소 증가

□ 작은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

- 고창 등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은 작은 영화관 가맹점 등록(2016.9)
- (주)인터파크 가맹점 확보(2016. 10) : 농촌지역 작은영화관과 도심지역 독립영화관 등에서 결제서비스 가능

□ 인터넷 서점 사용 노력

- 온라인 서점 개설(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 도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홍보

□ 교통업종 추가 관련 협의 중

- 교통(철도, 고속버스) 업종 추가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2017. 1)

〈표 4-9〉 업종 가맹점 수

업종명	가맹점 수	업종명	가맹점수
미용실	2,817	안경점	339
화장품점	2,699	수영장	14
스포츠 용품	1,660	미용재료	140
의료기기 및 용품	572	영화관	21
서점	453	공연장/전시장	92
종합스포츠센터	262	경기장	3
펜션, 민박	410	놀이공원	7
찜질방 / 목욕탕 / 사우나	206	요가	231
레포츠클럽	35	관광여행사	221
레저용품점	770	관광기념품	68
문화/취미	153	음반판매	31
화원	1,252	피부미용원	1,305
사진관	366	계	14,127

주 . 2017년부터 충북과 동일하게 병원, 약국 제외

〈표 4-1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가맹점 현황(2017.1. 2일 기준)

업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합계
경기장	3														3
공연장/전시장	56	4	8	1	3		5	1	4		2	1	2	5	92
관광기념품점	25	7	2	2	24		3		4				1		68
관광여행사	82	36	35	12	6	7	8	2	6	4	1	10	5	7	221
놀이공원	4				1						1			1	7
레저용품점	195	126	107	18	30	9	15	1	222	4	2	6	10	25	770
레포츠클럽	16	7	1	1	2		2		2	1				3	35
문화/취미기타	75	15	16	9	9	6	8	1		3	2	2	4	3	153
미용원	1,193	477	529	190	113	49	92	19	10	15	10	18	50	52	2,817
미용재료	73	19	27	7	8	4	2								140
사진관	170	62	51	23	15	8	5	4	5	4	1	2	3	13	366
서점	225	71	79	14	13	10	15		1	4	2	1	4	14	453
수영장	6	4	2						1		1				14
스포츠용품점	711	274	283	111	88	49	15	6	32	4	7	8	34	38	1,660
안경점	157	46	58	26	11	13	7		4	1	1	3	7	5	339
영화관	9	3	1			1		1	1	1	1	1	1	1	21
요가	133	39	29	5	6	2	9	1		2			2	3	231
음반판매점	20	1	5	1		2	2								31
의료기기및용품	327	53	80	29	15	21	15	4	3	2	1	3	7	12	572
종합스포츠센터	140	39	30	12	11	10	4		1	1		1	3	10	262
점심/방목유원지/사우나	41	40	33	20	12	13	16		8	4	3	2	6	8	206
펜션/민박	79	29	3	17	38	1	24	13	76	6	9	9	24	82	410
피부미용원	649	222	214	74	53	18	14	1	6	3	1	9	26	15	1,305
화원	519	183	194	93	64	32	43	10	15	7	7	19	34	32	1,252
화장품점	1,252	479	499	115	76	81	46	17	10	6	9	11	50	48	2,699
총합계	6,160	2,236	2,286	780	598	336	350	81	411	72	61	106	273	377	14,127

주. 생생바우처 가맹점확대 ('16. 10월 8,100개소 → '17. 1월 14,127 / 6,027개소 증가)

특히, 고창 동리시네마 등 작은영화관 등록완료 / 온라인 서점 사용등록 추진 중

주) 본사가 전북지역이 아닌 메가박스 영화관 등(남원 등 3개소) 플랜차이즈점은 통계에서 제외됨

(3) 전북 사업량 및 가입률

〈표 4-11〉 전북 생생카드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카드 발급실적률	비고
2016년	30,000	3,600 (도 900, 시군 2,100, 자 600)	37.8% ·'16년 1차(5,846명), 2차(2,485명), 3차(2,549명), 4차(467명)	·연령 : 20세이상~65세미만 ·금액 :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
2017년	15,000	1,800 (도 450, 시군 1,050, 자 300)	100.0%	·연령 : 25세이상~65세미만 20~24세(기혼 여성농업인) ·금액 :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

〈표 4-12〉 사업량 산출기준

연령	여성농업인 (A)	'16년 대상자 (B)	비율 (B/A)	2017 예상인원	사업량 산출
계	55,066	11,347		14,975	여성농업인의 27.2%
20~24 기혼여성	241	0	15%	40	기혼 여성농업인의 15%
25~34	5,010	0	15%	751	농가인구의 15%
35~65	49,815	11,347	22%	14,184	'16년 대비 125%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도와 시군 공무원에 의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구분	결과	비고	
카드발급	지역 농협에서 카드발급 대행	농협	
	카드발급을 농협 외 금융기관으로 확대	도·농협	
	충전식 카드도입	농협	

가맹점 확대	마트, 약국, 병원	도	복지부 협의
	도서 및 화장품 등 온라인쇼핑몰	도	
	찜질방, 영화관내 스넥코너 식당, 교통카드	도	
	미용실 등 미등록업체 등록	시군·농협	
	전통시장내 상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지원	도	복지부 협의
	업종코드 불부합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업체에 업종코드 불부합 해결		
	마트, 식당, 시장	도	"
	마트, 편의점, 온라인 서점	도	"
지원대상	농지면적 완화(7ha) 휴폐업 사업자등록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도	복지부 협의
	연령 하한선 완화	도	'17년 개선
	이주여성농업인, 연령 완화	도	'17년 개선
	농외소득 기준지정으로 겸업농 제한 완화	도	
	연령제한 완화(20~70세)	도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및 연령 하한선 완화	도	'17년 개선
기타	사용금액 및 잔액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	농협	
	홍보 팜플릿 및 가맹점 스티커 배부	도·시군	제작중
	가맹점 스티커 배부	도·시군	제작중
	연간 지원액 상향	도·시군	장기검토
	카드잔액 이월	도·농협	
	심사위원회 절차 삭제	도	
	지원금 상향 및 자부담 삭제	도	복지부 협의
	자부담금 삭제	도	"
	구비서류 간소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첨부 불필요	도	
	카드사용시 사용액, 잔액문자서비스	농협	

(5) 홍보

홍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포스터 제작, 마을방송, 사업지침 설명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 홈페이지에 가맹점 전체 목록 제시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맹점 현황에 대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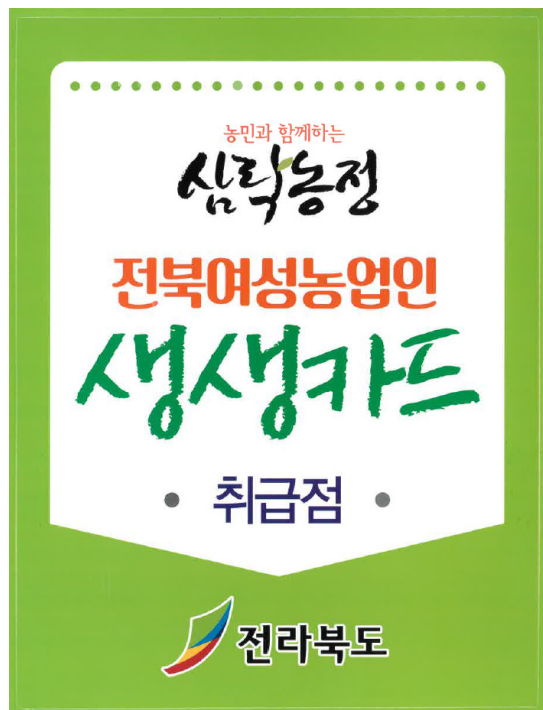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홍보와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도 대표 홈페이지 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안내 페이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운영시기 : 2017. 2월부터
- 제작협조 : 대외협력국 홍보기획과
-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대상·지원내용·사용처 등 구체적인 제도안내
 - 온라인 서점 등 이용방법 안내 및 배너 설치

□ 가맹점 입구에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

가맹점에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가능한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림 4-1〕 전북 가맹점 스티커

(6) 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11. 29.(화) ~ 12. 5.(월) / 7일간
- 조사방법 : 스마트폰 여론조사
- 조사대상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사용자 11,347명중 현재 실사용자 1,200명 문자 발송 / 263명 설문응답
- 주요내용 : 사용자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제도홍보, 사용자 연령대 및 제도 만족도, 신청접수 기간 설정 및 사용처 선호도 조사,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 등

□ 조사결과

〈표 4-14〉 전라북도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결과	비고
만족도	매우만족(50%), 만족(30%), 보통(16%), 불만족(3%), 매우불만족(1%)	불만족(10명) 사유 : 사용처 제한 8명, 지원금액 부족 2명
지원연령	40세미만(13%), 40~60세(72%), 60세 이상 42명(15%)	
신청기간	1월 28%, 1~2월 30%, 2월(2%), 2~3월(17%) 연중(23%)	
주사용처	미용실(33%), 화장품점(12%), 영화관(13%), 목욕탕(7%), 스포츠센터(8%), 기타(27%)	
주요사용지	거주지 시군(83.8%), 인근 타시군(13.7%), 타시도(2.5%)	
사용기한인지여부	알고 있다(96.7%), 모르고 있다(3.3%)	
추가업종\요청	관광여행사(21%), 사진관(5%), 회원/음반(16%), 레저용품(20%), 기타(38%)	→ 기타(74명) : 마트, 음식점, 교통(고속버스, 기차, 항공권), 병원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신청(74.6%),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25.4%)	
기타요청사항	카드발급개선(20%), 지원금 상향(82%), 연령기준(14%), 인정조건완화(23%), 기타(6%)	기타(16명) 업종확대(병원, 마트), 사용금액 문자안내

3. 소결

2017년 첫 시작하는 행복바우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충북과 전북의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충남의 경우 현재 1차와 2차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2차 대상자 모집 시 지침을 개선하여 유동적·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와 농협의 농정지원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약 42,000여명(6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행복바우처 사업을 처음 시작한 충북은 첫 해 약 40% 가입률에서 현재 별도 홍보 없이도 약 40,000명(2017년) 목표 달성하여 4월말 카드 발급 완료하였다. 이제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든 경우이다.

초기에는 과대한 농사 및 가사 병행으로 인한 만성 질병 예방·치료를 포함한 목적이었다가 2017년 의료비가 제외되어 목적 및 사용처가 수정되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기준 및 지침을 많이 완화하여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이다.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한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연령 확대 및 이주여성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기준은 완화하였고, 첫 해 사업추진 시 1차(4월 25일~)~4차(9월 26일, 10월 21일 카드발급) 까지 추진하여 15,000명 대상 중 11,347명(75.6%)이 가입하였다.

2017년 사업 추진은 가입 신청을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가입 및 카드 사용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이다.

또한 전북의 경우 업종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하여 작은 영화관과 인터넷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가맹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제시·갱신, 생생카드 지원 홈페이지 운영, 가맹점 입구에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등 사용 편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 수요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행복바우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는 서산시, 홍성군, 부여군 3개 시군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2~9월 22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선정된 시군은 행복바우처 사업의 가입률이 가장 많은 시군이며,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복지 차원에서의 행복바우처에 대한 인지, 실태, 만족도, 정책시급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행복바우처 사업의 쟁점 도출과 개선방안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지 대상은 여성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행복바우처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여성과 행복바우처 사업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5-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복지 차원에서의 행복바우처에 대한 인지, 실태, 만족도, 정책시급성 파악
조사대상	• 농어촌 여성
조사범위	• 충청남도 3개 시군(서산시, 홍성군, 부여군)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연령, 결혼여부, 여성농어업인단체, 영농형태, 본의명의자산, 귀농귀촌여부, 영농지위, 1일평균일하는 시간, 행복바우처 수혜 여부 • 여성농어업인 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 여성농어업인 전반적 실태, 복지서비스 격차의식, 만족도, 정책추진의 시급성, 추진할 정책, 정책 접근 방법 • 행복바우처 사업의 이해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지정도, 사업 알게 된 방법, 사업의 필요성, 만족도, 운영상 문제점, 사용처, 가맹점, 복지와의 관계도, 개선방안 • 행복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방법, 필요성, 가맹점, 기여도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통한 1:1 면접
조사기간	• 2017년 9월 12일 ~ 9월 22일(10일 간)

조사 대상자는 각 시·군별로 72명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일정하게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50대와 60대가 각각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0대, 70세 이상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농어업이 평균 7.9시간, 집안일이 2.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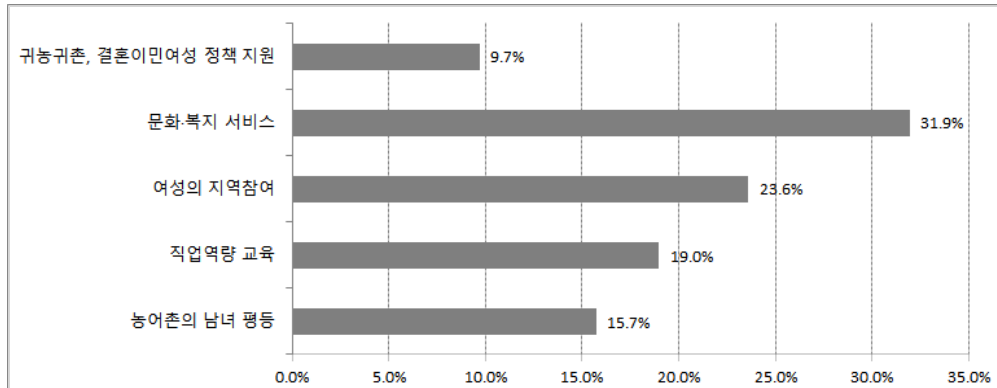
〈표 5-2〉 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분		전체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합계		216	72	72	72
연령	30세 미만	0	0	0	0
	30대	12	5	5	2
	40대	44	13	16	15
	50대	73	24	24	25
	60대	73	26	23	24
	70세 이상	14	4	4	6
결혼 여부	미혼	0	0	0	0
	기혼	216	72	72	72
여성농어업인 단체	가입	120	38	38	44
	미가입	96	34	34	28
영농형태	전업	180	60	60	60
	겸업	36	12	12	12
본인명의 자산	있음	97	28	32	37
	없음	119	44	40	35
귀농귀촌 여부	원주민	191	65	64	62
	귀농귀촌인	25	7	8	10
영농지위	농어업경영주	28	7	11	10
	공동경영주	113	36	36	41
	보조농업인(조력자)	34	16	10	8
	가족종사자	41	13	15	13
1일 평균 일하는 시간	농어업	7.9	7.6	8.0	8.0
	집안일	2.7	2.6	2.6	2.8
행복바우처 수혜 여부	혜택 받음	80	24	27	29
	받지 못함	136	48	4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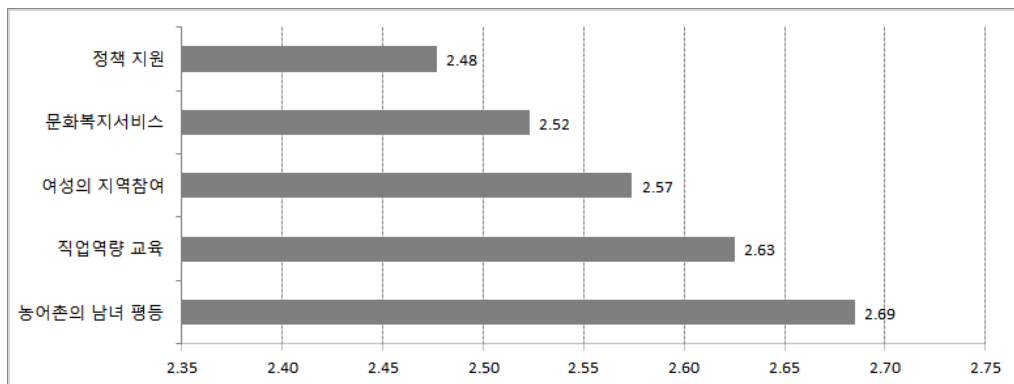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은 문화·복지 서비스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지역 참여가 23.6%, 직업역량 교육이 19.9%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1] 여성농어업인계획 부문의 중요도

여성농어업인의 실태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농어촌 남녀 평등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역량 교육이 2.63, 여성의 지역 참여가 2.57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2] 여성농어업인 실태

* 매우 낮음 1점, 낮음 2점, 보통 3점,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

도시와 농어촌의 복지 부분 격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격차가 높다는 의견(높음, 매우 높음)이 76.8%로 나타나 대다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복지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여군이 격차가 높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 도시와 농어촌 복지 부분 격차

(단위 : %, 점)

구분	전체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전혀 없음	0.0	0.0	0.0	0.0
없음	1.9	2.8	0.0	2.8
보통	21.3	23.6	19.4	20.8
높음	63.4	61.1	69.4	59.7
매우 높음	13.4	12.5	11.1	16.7
[5점 평균]*	3.88	3.83	3.92	3.90

* 전혀 없음 1점, 없음 2점, 보통 3점, 높음 4점, 매우 높음 5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의견(만족, 매우 만족)이 전체의 11.6%로, 불만족하다는 의견(매우 불만족, 불만족) 53.7%에 비해 현저의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순서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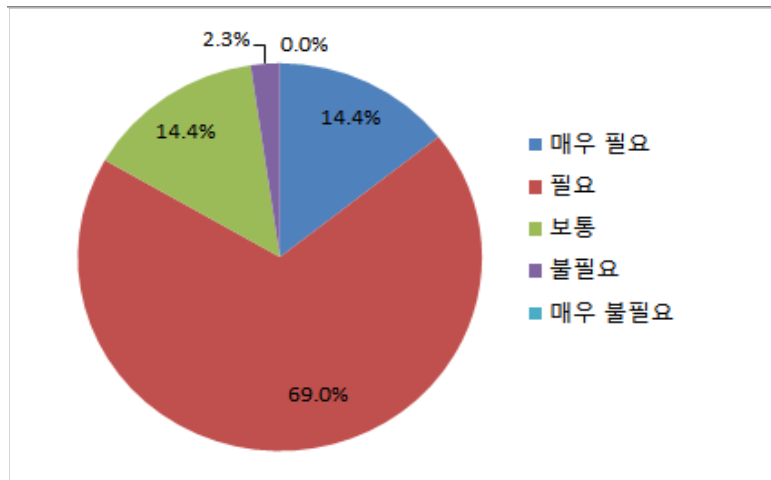
〈표 5-4〉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복지 부문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전체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매우 불만족	12.5	13.9	5.6	18.1
불만족	41.2	36.1	54.2	33.3
보통	34.7	37.5	30.6	36.1
만족	11.6	12.5	9.7	12.5
매우 만족	0.0	0.0	0.0	0.0
[5점 평균]*	2.45	2.49	2.44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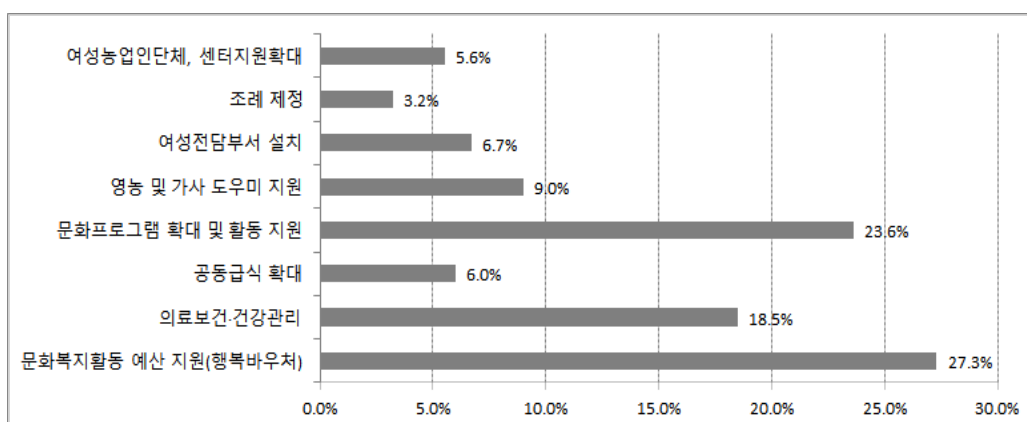
*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문화·복지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필요, 매우 필요)이 83.4로, 불필요 하다는 의견(매우 불필요, 불필요)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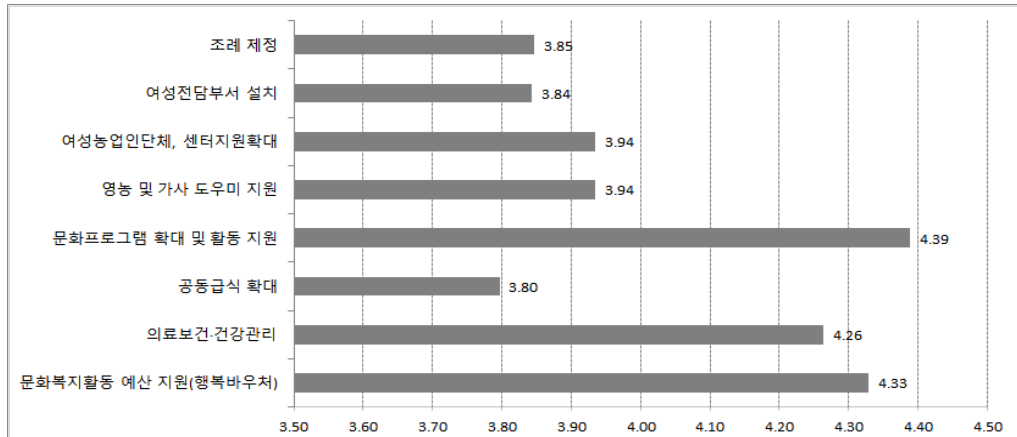
(그림 5-3) 문화 복지서비스 정책추진의 필요성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문화복지활동 예산 지원 (행복바우처)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활동지원이 23.6%, 의료보건·건강관리가 18.5%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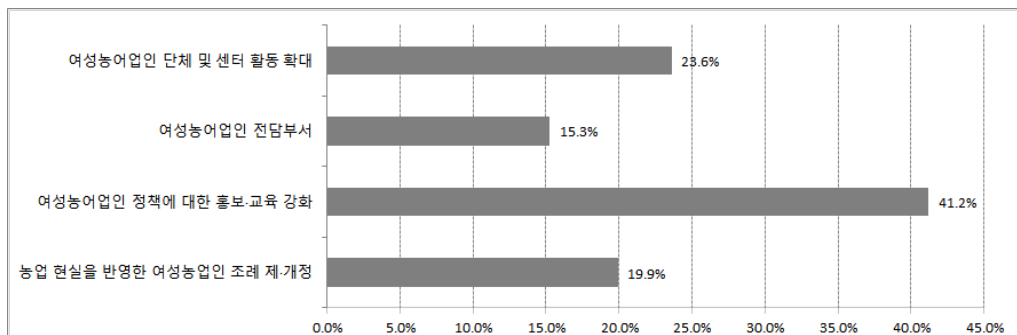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활동 지원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복지활동 예산 지원(행복바우처)가 4.33, 의료보건·건강관리가 4.26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5] 사업 추진의 중요성

* 매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중요 4점, 매우 중요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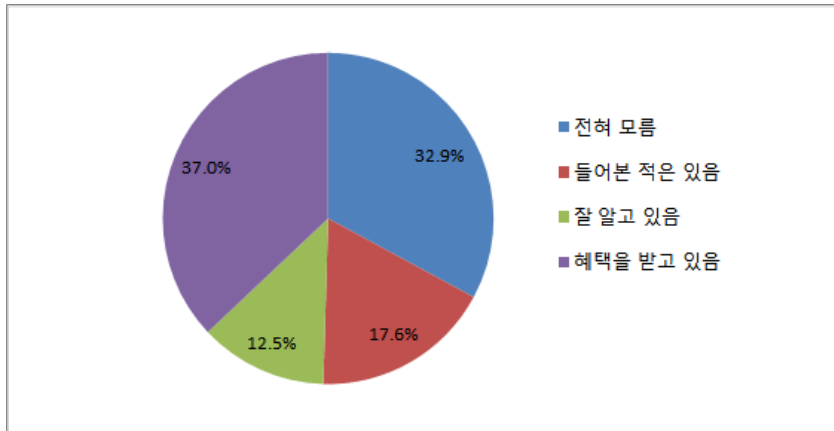
농어업정책을 여성농어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센터 활동 확대가 23.6%, 농업 현실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조례 제·개정이 19.9%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6] 농어업정책을 여성농어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67.1%가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32.9%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7〕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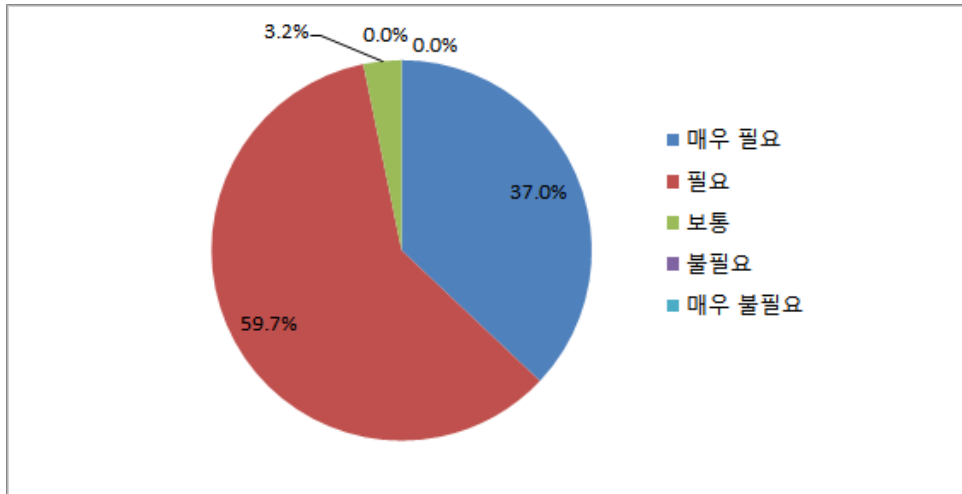
행복바우처 사업의 전달 방식은 이장과 부녀회장이 60.7%로 다른 수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홍성군은 여성리더(5.6%)를 통한 방식에서 서산시(1.4%)나 부여군(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농업인센터나 농업기술센터(11.1%)를 통해서는 서산시(18.1%)나 부여군(18.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5〉 행복바우처 사업의 전달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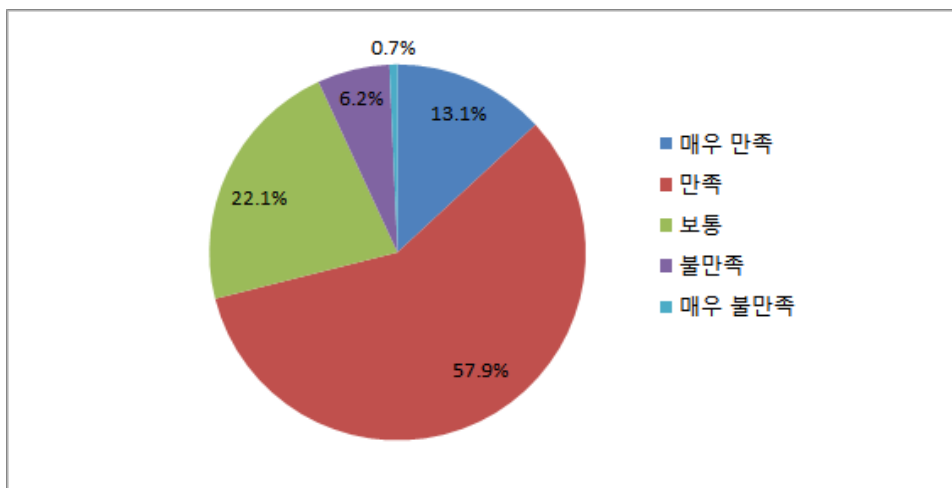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이장	27.8	26.4	26.4	30.6
부녀회장	32.9	33.3	33.3	31.9
공무원	8.3	8.3	8.3	8.3
주변사람(가족포함)	5.6	5.6	5.6	5.6
여성농업인센터·농업기술센터	15.7	18.1	18.1	11.1
홍보물 및 방송	6.9	6.9	6.9	6.9
여성리더	2.8	1.4	1.4	5.6

행복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의견(필요, 매우 필요)이 전체의 96.8%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매우 불필요, 불필요) 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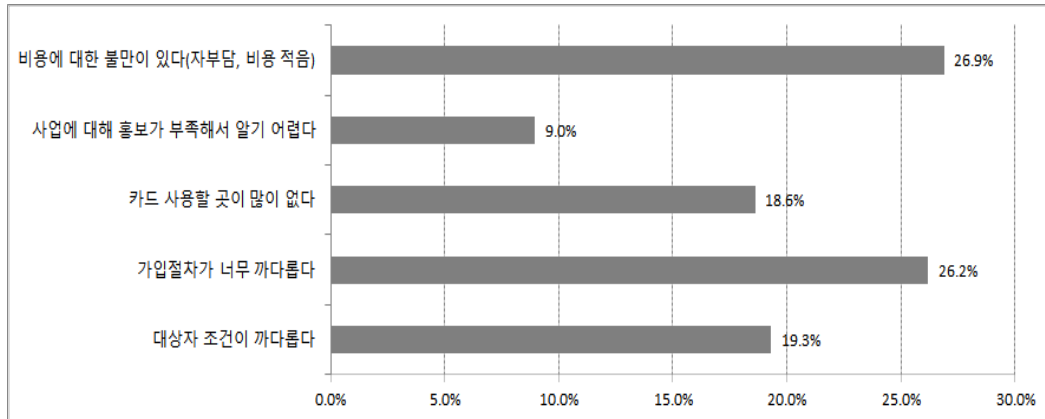
(그림 5-8) 행복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행복바우처 사업의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의견(만족, 매우 만족)이 전체의 71.0%로, 불만족한다는 의견(매우 불만족, 불만족) 6.9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9) 행복바우처 사업의 만족도

행복바우처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자부담, 비용 적음)’는 답변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답변이 26.2%,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다’는 답변이 19.3%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10) 행복바우처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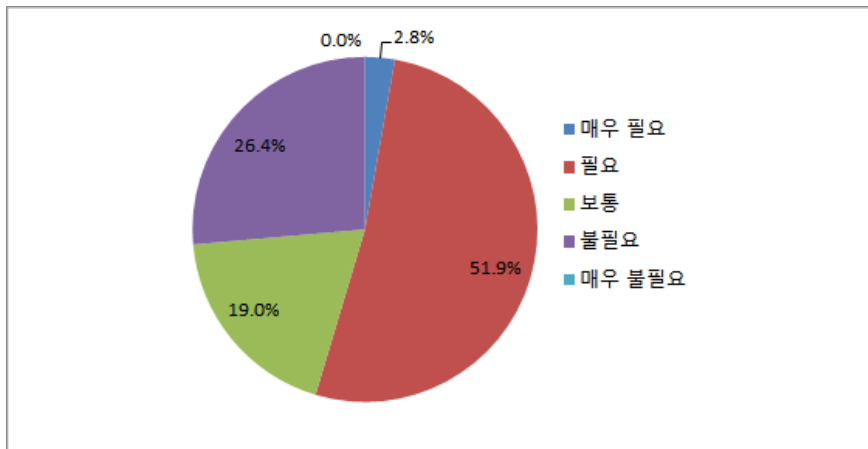
행복바우처의 사용처는 의료나 하나로마트, 농기계수리점의 농협판매점의 비율이 66.6%로 높게 나타났다. 홍성군은 신변잡화 부문(11.1%)에서 서산시(8.3%)나 부여군(9.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서산시는 여행 부문(12.9%)에서 부여군(9.7%)이나 홍성군(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6〉 행복바우처의 사용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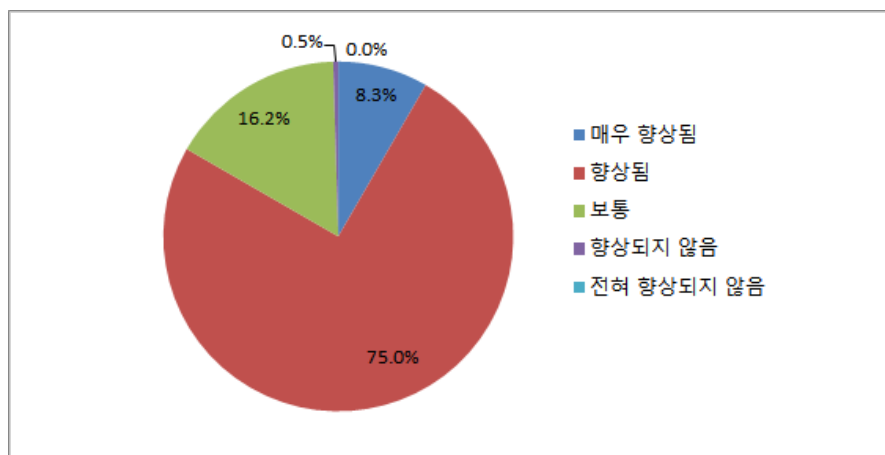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신변잡화	9.7	8.3	9.7	11.1
의료	40.7	37.5	44.4	40.3
레저·스포츠·문화·취미	13.9	13.9	13.9	13.9
여행	9.7	13.9	9.7	5.6
농협판매점	25.9	26.4	22.2	29.2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터넷(온라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필요, 매우 필요)이 전체의 54.6%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매우 불필요, 불필요) 45.4%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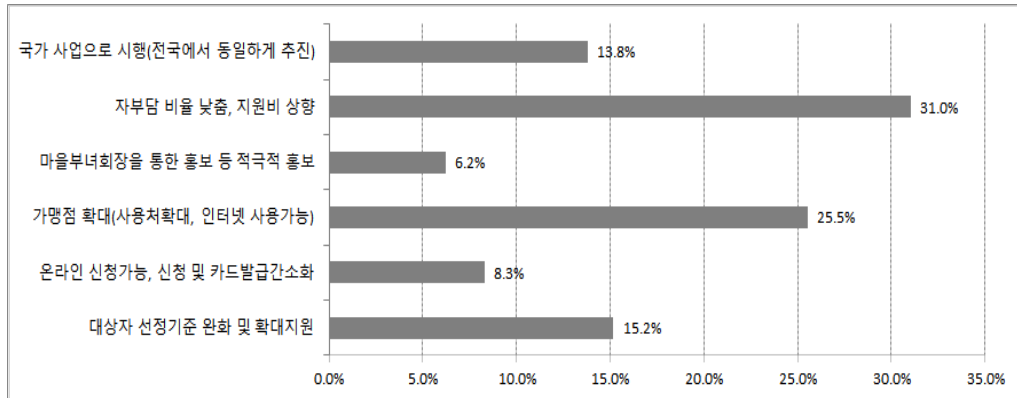
(그림 5-11) 행복바우처 사업의 인터넷(온라인) 사용의 필요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향상됨, 매우 향상됨)이 전체의 83.3%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전혀 향상되지 않음, 향상되지 않음) 0.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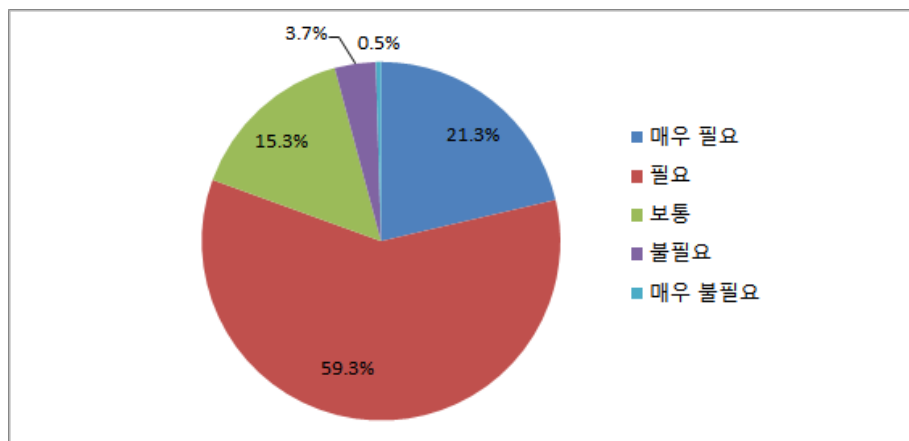
(그림 5-12) 행복바우처 사업의 기여도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부담 비율 낮춤, 지원비 상향’ 답변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맹점 확대(사용처확대, 인터넷 사용가능)’를 원하는 답변이 25.5%,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답변이 15.2%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5-13)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

행복바우처 사업의 국가운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필요, 매우 필요)이 전체의 80.6%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매우 불필요, 불필요) 4.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4) 행복바우처 사업의 국가운영 여부

4) 소결

☐ 여성농어업인 집안일에 비해 농어업일에 약 3배 시간 소요

1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농어업이 평균 7.9시간, 집안일이 2.7시간으로 조사되어 여성농어업인의 농사일과 집안일의 병행 심각성 뿐 아니라 과중한 농사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어업인은 문화·복지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에서의 문화 복지서비스 실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문화·복지 서비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책지원과 문화복지서비스 실태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농 문화복지부문 격차 매우 심각하고, 정책의 필요성은 압도적으로 높음
도농 문화복지 격차에 대해 76.8%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복지부문의 불만족도 53.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필요성은 83.4%로 도출되어 농어촌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업정책 홍보·교육을 위한 정책 요구가 41.2%로 매우 절실함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정책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센터 활동확대 순으로 도출되어 정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복바우처에 대해 인지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았으며, 이에 대한 확대도 요청하고 있음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해 67% 이상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전달방식은 이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은 96.8% 압도적이며, 행복바우처 사업 만족도도 71.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83.8%로 매우 높게 도출되었다.

□ 행복바우처 주요 사용처는 문화의 비중보다는 의료 복지와 생활 복지인 것으로 도출됨

주요 사용처는 의료기기, 하나로마트 농기계 수리점인 것으로 나타나, 수혜자들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목적의 명확화, 사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 개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군급에 비해 시급의 경우 특이하게 여행부분 사용처 비중이 군급보다 다소 높게 도출되었다.

□ 문제점으로는 자부담 부문, 지원비,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 등에 대해 제시됨

문제점으로는 자부담에 대한 불만과 가입절차가 까다로움을 표명하였고, 인터넷 사용 찬반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자부담 비율 낮춤과 지원비 상향, 그리고 가맹점 확대 순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개선사항으로 압도적(80.6%)으로 국가에서의 사업 운영을 요구하였다.

2. 인터뷰조사

1) 조사 개요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행복바우처에 대한 의식조사는 타 도 담당공무원, 충청남도 전문가, 여성리더, 충남도 사업 추진 담당자, 시군 사업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조사의 목적은 전문가와 리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현실과 복지차원에서의 행복바우처 사업 논의를 통해 충남이 가져가야할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 방식은 워크숍 및 자문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여성농어업인 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표 5-7〉 인터뷰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 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타 도 담당공무원, 충남 여성리더, 충남 공무원, 충남 여성농어업인팀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현실 및 개선방안 복지차원에서의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방문 면접조사, 워크숍 및 자문회의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02.22 충남 여성농어업인팀원 2017. 04.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2017. 06.08. 2017. 07.1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라북도 담당공무원 2017. 07.28.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장, 2017. 08.02. 경기도 담당공무원 2017. 08.03.충청북도 담당공무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박사, 젠더&공동체 대표, 충남 농정팀장 및 담당 2017. 08.09 두리공간환경연구소 대표 2017. 09.11 홍성군 공무원, 부여군 공무원,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2) 여성농어업인 복지 의식 인터뷰 결과

□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해결했다는 생각은 맞지 않음

월 1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시책이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를 모두 해소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를 마중물로 생각하여 여성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단계별 제고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과소, 노령,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특징 속에서 여성농어업인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농사일과 가사일 병행이라는 여성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향유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에 여성농어업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여성농어업인 복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필요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정책도 여성정책도 잘 들여다보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밀착형 지원 추진이 필요하다.

□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 필요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지위향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 공동경영체 제도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농업경영주 제도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경우 토지 소유가 거의 없기에 행복바우처 사업 등록시 조건을 농업 공동 경영체 제도 등록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즉, 등록을 해야지 선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진다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체 제도 등록이 매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3) 행복바우처 정책 의식 인터뷰 결과

□ 사업목적에 대한 명확성 필요

문화저소득 농어업인의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보다는 문화나 취미, 건강생활에 투자되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여 사용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행복바우처 정책에 부합하는 목적 설정이 필요하다. 문화 저소득 농어업인의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보다는 문화나 취미, 건강 증진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농어촌지역의 여성 문화·복지 도농격차 해소 지향을 위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강, 의료의 초기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의료비 등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 하에 행복바우처의 초기 목적을 변경하였다. 가맹점에 따라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가맹점 및 사용처가 결정되어야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다.

□ 문화·복지, 도·농 격차 해소에 대한 적극적 목적 및 방향 필요

농어촌 현실은 다양한 복지·문화 등 정책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복지·문화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도시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고, 문화시설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시에 비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충남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충남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욕구 고찰, 충남 2017년 사업 추진현황 등의 계획, 연구, 사업분야에서 농어촌 여성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예산 및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선정 대상자 기준이 명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기존 주민이 소외되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은 정책과 혜택에 대해 농업인보다 참여의지가 높기에 과거 농업경력 등을 우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선정기준은 지침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기준에서 누락된 신청자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 및 잘못 선발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검토가 필요하다.

□ 대상자 확대 필요

충남도는 농어촌, 농어업인, 농어업에 대한 3농 혁신 3단계 추진 중으로 우리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초기 복지지원 수요조사 결과 약 76,00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후발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자 및 내용은 선도적·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5ha 미만 중소 고령농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 향후 피드백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단계별 확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가맹점 확대(사용처) 필요

농어촌은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행복바우처 첫해의 경우 가입률이 높지 않아서 충남도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 용이성을 위해 농협하나로 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부분보다는 생활비로 쓰일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일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당초 목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사업업종 중 대부분의 도에서 인터넷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낮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서점을 제외한 것은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혜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용처 및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책을 살 경우 현지에 없으면 천안이나 대전 서울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기에 인터넷 도서 구입 등을 인정해 주어야 여성농어업인의 편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부분의 개선들이 여성농어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 사료된다.

□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제도 마련

현재 모든 도차원에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사업 추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적 형평성, 운영 관리 체계의 명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각각의 도차원에서 추진되기에 목적, 사용처, 비용, 수혜 대상자, 운영의 불편함, 공무원 업무 과다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전국 도 차원의 통일된 목적 및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사업 사용처에 대한 전국 도차원의 공유 및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온라인 서점 사용이 가능하고, 충남의 경우 하나로마트, 경남의 경우 고속버스와 철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북은 가맹점을 경북·대구로 한정하는 등 도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용처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한 후, 통일성 있는 사용처가 필요할 것이다.

□ 홍보

가장 큰 홍보방안은 언론보도 및 신문을 통한 홍보일 것이며,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에 여성 중심적 정보 전달체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로 농어촌은 이장을 통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에 관심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 이에 부녀회장 등 여성농어업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필요

마을별로 영화보는 날, 머리하는 날 등 행복바우처를 농어촌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바우처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말 시상,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하도록 한다. 농어촌 여성들이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복바우처를 통해 정서함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쟁점 도출

쟁점은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에서의 쟁점과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에서의 쟁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쟁점을 위해 정책, 연구, 사업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행복바우처 정책 쟁점도출을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과의 비교, 행복바우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차원의 지침·운용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의식조사를 통해 쟁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에서의 쟁점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 사업에 대해 고찰한 결과, 모성보호복지, 문화접근성복지, 고령영세농어업인 복지, 정책 추진 및 체감을 위한 복지로 구분되었다. 그 중 고령영세농어업인 복지로는 행복바우처 사업, 영농가사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공동급식, 접근성 지원,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의료부분이 도출되었으며, 문화접근성 복지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 추진 및 체감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조례 제·개정, 전담부서에 대한 사업이 도출되었다.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에서의 쟁점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과 각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의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바우처 사업의 효과로는 첫째, 여성농어업인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육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문화 교류 활동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직업적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긍심을 높여주는 매우 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셋째, 여성농어업인들끼리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은 문화복지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낮기에 문화 복지 향유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에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소통을 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발행된 복지카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행복바우처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문의 도·농격차 해소가 가능한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하기에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카드 발급·지원을 통해 도·농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귀농 귀촌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²³⁾

2. 정책제언

1) 여성농어업인 복지 차원

(1) 농어촌여성 복지 공감대 형성 포럼 운영 및 사업 발굴

농어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농사일까지 함께 병행해야하는 역할로 변화되고 있다. 예전의 농어업보조자에서 이에 생산·가공·판매·체험 등 많은 분야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와 농어업의 주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집중되는 권위주의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대상자가 되었고, 여성농어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한지 약 20년이 다되어가지만 실제 여성농어업인의 인식, 권리, 위상, 복지 등 실효성에 대한 정책 체감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복지 지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3) 오미란외,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부
충청남도, 2016, 충남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에 여성 지위향상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 포럼이 운영되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직업적 영역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대 형성 포럼을 위해 농식품부 및 농정국 차원의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는 보지 보편성 원칙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들이 피해 받는 접근성, 하드웨어 시설, 프로그램 등 여러 부분이 취약하기에 직업적 복지로서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에서 매우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2015년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되었으나 2016년 지자체 예산사업 추진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 공동급식과 행복바우처 사업 등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며, 이러한 농어촌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포럼을 운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행복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성농어업인 복지의 전체가 아닌 의미가 매우 큰 하나의 사업일 뿐인데 마치 복지의 주요 정책으로 논의 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공감대 형성 추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 복지 지원에 대한 논의 및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담부서 및 여성농어업인 지도단 신설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1998년 농림부 내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축소됐고, 2013년에는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 됐지만 인력변화 없이 명칭만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어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농어촌사회에서 주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열악하고 육성·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 성 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기에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하여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개발과 실천 노력을 추진하여야 한다.²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 핵심동력인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6월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²⁵⁾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7. 6. 1

제3조의2(전담부서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07163(제안일자 2017.06.0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원들도 "제주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전담 부서·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역할도 농사일, 마을 대소사, 아동 보육·양육, 가정 내 돌봄 노동 등 일과 생활 양 측면에 걸쳐 광범위하다며 여성농업인 복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²⁶⁾

전라남도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지역 역할 강화, 애로사항 해결 및 의견 수렴 등의 소통창구로서 도청 농림축산식품국 내 ‘여성농업인 지원단’ 을 2016.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각 분야별 농업인 전문 상담과 신규 시책 발굴 및 대안 마련으로 양성평등, 지역역할 강화, 직업역량강화, 복지·문화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24) 이뉴스투데이, 변고은, 김금분 강원도의원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위한 정책 강화” 촉구, 2017.9.5.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추진, 2017.6.1

25) 한라일보, 2017.6.1., 부미현,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추진

26) 연합뉴스, 2017.8.18., “정부·지자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하라”

(3) 농어촌복지 학교 운영

현재 복지에 대한 사업은 농촌 행복꾸러미 사업, 문화바우처, 행복바우처 등 많이 있으나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해도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신청제이다. 농어촌지역의 복지 혜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하기 쉽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하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 복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가치, 행복, 누릴 권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마을을 대상으로 농정관련 복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설명회를 통해 농정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 연 초 행사시 브리핑 등을 추진하고, 연초 한 장짜리 리플렛 제작, 여성농업정책관련 책자 제작 등을 통해 기술센터, 여성단체, 읍면사무소, 농협 등에 비치하고 각 관련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함께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농어촌 복지 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

2) 행복바우처 정책 추진 차원

(1) 행복바우처의 국가사업 역제안

지속되는 복지바우처사업의 국가사업화 요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여성농업인 복지카드의 정부사업화에 대해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의 확대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발전의 자부심을 이끌 구심점의 한 방편이란 점에서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촉구되고 있다.

이에 행복바우처 공론화 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여성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모든 도차원에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사업 추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적 형평성, 운영 관리 체계의 명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7개 도가 모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 투입 부분에서 단체장이 바뀌면 없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에 국가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의 경우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인원을 축소해 버릴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법도 제정되어야 하며, 여성농업인 관련법에 행복바우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수정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7. 6. 1

2017년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 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은 여가활동이용권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여가활동이용권은 여성농어업인이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07163(제안일자 2017.06.01.)

□ 행복바우처 공론화 프로세스 추진

- 국가적 정책으로서의 의미 설정
 - 7개 도가 연계하여 토론회, 철학적 근거, 집행 현황, 국가적 정책으로서의 의미 설정
- 지자체장 연대 토론회 추진
 -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주도가 되어 각 지자체 장이 연대하여 토론회 추진(국회의원 포함)
- 전국 동일한 기준안 마련

- 현재 지역별로 금액, 대상, 조건, 업종 등 차이가 있음
- 지원 조건, 보편적 복지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통일시켜야 함
- 국비 사업 추진시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는 타당한 논리 중요
- 법 제정 및 관련법 수정

□ 문화바우처와 동일한 형태의 추진·운영방안 추진

문화바우처와 행복바우처는 사업 대상자가 다르지만 목적이 유사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접근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문화바우처와 광역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행복바우처는 추진·운영부문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행복바우처는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용처를 찾기 어려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매우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각의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목적은 동일하나, 목적에 따른 가능 사용처가 달라 향후 농어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가맹점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힘들고, 온라인 사용도 불가능하여 카드 사용의 집행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의 경우 온라인 사용 및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여 카드 발급 및 사용이 매우 용이하다.

(2) 행복바우처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앞장에서 충남 및 타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침을 분석하였고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바우처 운영에 대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행복바우처 운영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여성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의 설정
- 농어촌 지역의 적용대상 확대
- 사용처의 공간적 범위

- 사용 가맹점 업종 범위
- 신청 및 카드발급의 용이성
- 사업 신청 기간의 추진 기간
- 행복바우처 홍보강화와 관리 제도 도입

※ 행복바우처 사업 개선방안

첫째, 행복바우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전국 도차원의 동일한 목적 설정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시행(제주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모든 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바우처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기에, 농어촌여성문화·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행복바우처 사업의 동일한 목적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기존의 복지에 직업적 복지라는 것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다. 일반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직업적 복지로 접근되어야 중복 논란이 없을 것이고, 연령 제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도출되었고, 효과를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직업인으로서 대접받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업을 통해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머리를 할 때 농어촌에는 사용가능한 곳이 읍내에 정해져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여성들은 함께 이동하며 머리하러 가는 날이 생기는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는 성공 사례도 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내부 순환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여 범주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문화·미용 등을 통한 소모임 형성, 지역공동체 활동, 삶의 질 문화 등에 행복바우처가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 설정이 전국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행복바우처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의 목적인 사기진작, 직업적 자긍심 고취, 삶의 질 고취에 직업적 복지라는 부분까지 포함한 목적 재설정 및 통일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 사용처에 대한 전국 도차원의 공유 및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온라인 서점 사용이 가능하고, 충남의 경우 하나로마트, 경남의 경우 고속버스와 철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북은 가맹점을 경북·대구로 한정하는 등 도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용처가 제시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순환적 소비 차원에서라면 도내의 범위 차원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이 도, 시군, 자부담이기에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사용의 편의 차원을 고려한 사항이며 지역경제 내부 순환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 국가 사업으로의 추진 시에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에 국가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한 후, 통일성 있는 사용처 및 공간적 사용범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진 목적을 직업복지로 설정을 하면 연령 기준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가능하다. 농어촌은 70대도 생산가능인구이기에 농어업 생산 가능 직업 연령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예산 확보의 문제 상 최소한 75세 이하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농어촌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이기에 단계별로 예산에 따라 연령을 확대해 가는 것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1가구 1인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직업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1가구에 2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에 1가구 1인 기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가맹점에 대한 확보·발굴이 필요하다. 문화바우처 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고 전국 가맹점도 많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을 위해 가맹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50: 50의 의견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화·복지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가맹점에 대한 발굴과 함께 온라인 사용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서점의 경우 접근성도 낮고 판매하는 책 종류도 부족하여 서점을 포함한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농어촌에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 이용가능 한 가맹점 목록을 갱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아, 이장에게 지원대상여부인지 확인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교부받아야 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홍보뿐 아니라 신청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초기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입 시 필요한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여성의 경우 통장이 없는 여성이 많으며, 남편의 통장이나 아이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농외소득 확인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데 건강보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서류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과정이 4~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행정의 업무량도 매우 많으며, 건강보험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카드 발급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중앙농협까지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도시의 경우 접근성 및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번거로운 과정이겠으나, 농어촌의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시군농협과 읍면동(또는 시군)의 협의를 통하여 배부일자 등을 확정하고 농협 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배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발급율이 낮아짐을 방지하기 위해 타 도의 경우 공무원이 대행 발급을 지원하기도 하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을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 카드 발급이 매우 용이하기에 행복바우처 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 신청과 카드 발급의 용이성이 확보된다면 사업의 가입률 및 만족도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카드 발급 사업추진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홍보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1차 모집부터 4차 모집까지 진행되어 카드 사용 기간이 매우 짧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시군 단위로 3~5천명의 카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카드 발급 후 연말까지 사용기간이 짧아지는 어려움이 있다. 카드 사용처도 도시보다 매우 부족하고 게다가 카드 사용기간까지 짧아진다면, 사업 추진의 만족도 및 효용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같이 익년 12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연초에 카드 발급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사업초기에는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행복 바우처 제도는 문화·복지 제고를 위한 좋은 제도이기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수혜 여성농어업인들이 누락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동 이장협의회 등의 전달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행복바우처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이기에 부녀 회장, 여성단체,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개선회 등을 통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협과 읍면사무소, 이주여성 다문화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회관 포스터 등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대상자 선정 시 이장이 명확히 전달을 받아 대상 리스크를 확보하여 카드 발급받는 이동서비스를 제고하여야 한다. 그동안 주로 농어촌 이장을 통한 고착화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에 관심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기에 여성을 통한 홍보가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업으로의 역제안을 통해 국비확보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문화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국가 사업으로 추진 시 가입, 카드발급, 가맹점 확보, 관리 등이 용이할 것이다.

(3) 정책 활성화 방안 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활용 농어업인, 농촌 공동체 활성화 계기 등 사업추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강화하도록 한다.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여, 마을별로 영화보는 날, 머리하는 날 등 행복바우처를 농어촌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바우처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한 농어업인 대상 연말 시상,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하도록 한다. 농어촌 여성들이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복바우처를 통해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혜정·마상진,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2000
-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5
- 안수영·김종철·권용대,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육구 조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4
- 오미란,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5
- 충청남도, 「충남 제4차여성농업인육성계획」, 2016
- 해양수산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
- 이경림,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희원,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6
- 연합뉴스, 2017.8.18, “정부·지자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하라”
- 한국농어민신문, 오미란, 2017.2.10, 여성농업인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나?
- 월드경제신문, 2017.6.1, 이인영,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추진
- 이뉴스투데이, 2017.9.5., 변고은, 김금분 강원도의원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위한 정책 강화” 촉구
- 한국농어민신문, 2017.1.20,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바람 -전남, 경남, 충남 첫 도입
- 한국농어민신문, 2017.4.19, 여성농업인육성 제대로 되고 있나 -행복바우처/삶의 질 개선 한 몫-
- “정부예산 지원해야” 요구 커져
- 한라일보, 2017.6.1, 부미현,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추진
-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2015.11.2, “충남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성 평등 패러다임 접목 필요” 보도자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s://www.munhwanuricard.kr>
-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cacf.or.kr>
- 충청남도, 2017,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17,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충남도·시·군·농협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17,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지원계획(안),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17, 2017년도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행복바우처) 시행계획(안), 농정국,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부록1 농어업인 범위 및 기준²⁷⁾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비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27) 충청남도 내부자료

3)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 어업인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 준용

- [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농업인의 기준	확인 기준	확인 서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경영주 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경영체 등록확인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농지원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위의 사항 관련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관련 서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 체결	서면계약서,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영수증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아래조건 모두충족) - 농업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함께 등록 -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별지7호 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고용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한자 - 단 법인의 대표, 등기이사 제외	서면계약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고용		

4)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 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미만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양식 사업을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 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38,000㎡ 소유, 소 57마리 및 돼지 3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부록2 설문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련번호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설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설문내용은 연구 자료만으로 활용되고, 그 이외의 용도로써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행복바우처 사업 : 충남도와 시군에서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15만원, 자부담 3만원 포함)

2017년 9월 충남연구원장

■ 연구자 : 윤정미(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 041-840-1203

■ E-mail : coco@cni.re.kr

거주지	시군 :				읍면동 :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여성농어업인단체		① 가입 ② 미가입			
영농형태	① 전업 ② 겸업		본인명의자산		① 있음 ② 없음			
귀농귀촌여부	① 원주민 ② 귀농귀촌인							
영농지위(중복가능)	① 농어업경영주 ② 공동경영주 ③ 보조농업인(조력자) ④ 가족종사자							
1일 평균 일하는 시간	농어업		시간		집안일		시간	
행복바우처 수혜여부	① 혜택 받음 ② 받지 못함							

I . 여성농어업인 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1. (여성농어업인계획 부문의 중요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농어촌의 남녀 평등 ② 농어업인 직업역량 교육 ③ 여성의 지역참여
④ 문화·복지 서비스 부문 ⑤ 귀농귀촌, 결혼이민여성 정책 지원

2. (각 부문의 실태) 아래 부문의 여성농어업인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농어촌의 남녀 평등					
직업역량 교육					
여성의 지역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귀농귀촌, 결혼이민여성 정책 지원					

3. (격차의식) 도시와 농어촌의 복지 부분에 대한 격차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4.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문화·복지 부문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정책추진 필요성) 문화·복지서비스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6.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_____, _____

- ① 문화복지활동 예산 지원(행복바우처) ② 의료보건, 건강관리 ③ 공동급식 확대
 ④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활동 지원 ⑤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지원
 ⑥ 여성전담부서 설치 ⑦ 조례 제정
 ⑧ 여성농업인단체, 센터 지원 확대 ⑨ 기타사업 제시()

7. 다음 사업에 대해 추진의 중요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않음
문화복지활동 예산 지원(행복바우처)					
의료보건, 건강관리					
공동급식 확대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활동 지원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센터 지원 확대					
여성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정					

8. 농어업정책을 여성농어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 현실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조례 제·개정
 ②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③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④ 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센터 활동 확대

Ⅱ. 행복바우처 사업의 이해 및 개선방안(사업 알고있는 사람)

1. (인지 여부)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름” 답변 시 Ⅲ 으로 이동)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잘 알고 있음 ④ 혜택을 받고 있음

2. (공통-사업전달) 행복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이장을 통해 ② 부녀회장을 통해 ③ 공무원을 통해 ④ 주변 사람을 통해(가족포함)
⑤ 여성농업인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⑥ 홍보물 및 방송을 통해 ⑦ 여성리더를 통해

3. (공통-필요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4. (만족도)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다 ② 가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③ 카드 사용할 곳이 많이 없다
④ 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서 알기 어렵다 ⑤ 비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자부담, 비용 적음)

6. (공통-사용처) 행복바우처 사용처는 안경점, 한약방, 미용원, 레저, 스포츠, 문화, 여행, 농협판매장 등입니다. 어느 업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습니까?

- ① 신변잡화(안경점) ② 의료(한약방, 미용원 등) ③ 레저, 스포츠, 문화, 취미
④ 여행(숙박, 운송수단, 관광여행) ⑤ 농협판매장(하나로마트, 농기계수리점)

7. (공통-온라인) 인터넷(온라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는 인터넷 매장 사용 불가)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8. (공통-기여도) 이 사업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가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향상됨 ② 향상됨 ③ 보통 ④ 향상되지않음 ⑤ 전혀 향상되지않음

9. (개선방안) 행복바우처 사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확대 지원 ②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 및 카드 발급 간소화
③ 가맹점 확대(사용처 확대, 인터넷 사용가능) ④ 마을부녀회장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 홍보
⑤ 자부담 비율 낮춤, 지원비 상향 ⑥ 국가 사업으로 시행(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

10. (공통-국가 운영여부) 문화바우처 사업처럼 행복바우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입니다. 국가 운영시 모든 수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고, 카드 발급 및 인터넷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 행복바우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자문진 ·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김종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박사

전략연구 2017-22 ·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글쓴이 · 윤정미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12월31일/발행.2017년12월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3(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418-3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